

|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토론회 |

육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과제

2018. 11. 28. | 수 15:50-18:00

프레지던트 호텔 브람스홀 (19층)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토론회 |

육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과제

2018. 11. 28. | 수 15:50-18:00

프레지던트 호텔 브람스홀 (19층)



|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토론회 |

육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과제

PROGRAM

15:50~16:00	등록	
16:00~16:10	개회	사회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
16:10~16:20	인사말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
	축사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1부		
16:20~16:35	기조강연	초저출산 사회의 위기와 대응 - 새 정부의 저출산정책과 육아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포럼 TF 위원장)
2부		
16:35~17:10	발표 1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포럼 운영 현황 소개 이정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발표 2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포럼 운영 결과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포럼 TF 부위원장)
	발표 3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과제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17:10~17:20	휴식	
3부		
17:20~17:50	좌장	정미라 교수(가천대 유아교육학과)
	토론	김은실 교수(이화여대 여성학과)
		김태현 원장(아태인구연구원)
		양성은 교수(인하대 아동심리학과)
		이상구 대표(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허 선 교수(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17:50~18:00	질의 응답 및 폐회	사회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
18:00~19:00	만찬	

|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토론회 |

육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과제

CONTENTS

인사말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	7
축사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11
기조강연	초저출산 사회의 위기와 대응 - 새 정부의 저출산정책과 육아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포럼 TF 위원장)	15
발표 1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포럼 운영 현황 소개 이정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51
발표 2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포럼 운영 결과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포럼 TF 부위원장)	57
발표 3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과제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77

|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토론회 |

육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과제



인사말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선희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서서히 마무리하고 2019년 새해를 준비하는 이 때, 저희 연구소에서는 여러 귀빈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육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올해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추진하여 온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복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초저출산 사회,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과제」라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가 현 시점과 앞으로 육아정책 분야에 요구하는 방향성은 무엇이며, 육아정책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정책 과제가 시급한지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육아정책의 핵심 분야인 유아교육, 보육 정책 분야의 전문가를 비롯해, 사회복지, 가족정책, 경제, 국토환경, 여성, 의학(보건) 분야 등 8개 분야의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각 학문 관점에서 육아정책에서 다루어야 할 정책 과제와 향후 육아정책의 역할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하는 자리를 통해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육아정책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 따라서 육아정책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더욱 발전적인 논의와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위해 여러분과 이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를 적게 낳는 사회,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마주하며, 포용적 복지 관점에서 육아정책이 부족했던 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진지하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 토론회를 시작으로 “어떤 아이도 소외됨 없이, 어떤 가정도 소외됨 없이 이 사회의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를 고루 누리며, 아이들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 육아정책은 그간의 역할을 넘어서서 향후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토론회를 통해, 2004년 대통령자문 고령화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육아지원 정책’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중심으로 명명한 이래 협소한 분야에 고착화되어

있었던 육아정책이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여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연구소의 행사에 축사를 전해주셔서 행사를 더욱 빛내주신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님(원내대변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이후 본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진이며, ‘초저출산 사회,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포럼 TF’의 위원으로 참여해 주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미곤 박사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영옥 박사님, 이화여자대학교의 김은실 교수님, 건국대학교 병원 손인숙 교수님, 덕성여자대학교의 양옥승 교수님, 서울여자대학교 정재훈 교수님, 한국국토연구원의 천현숙 박사님, 중앙대학교의 최영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행사를 통해 연구 결과를 발표해주실 본 연구의 연구진인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과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박사님, 좌장으로 본 토론회를 이끌어주실 가천대 유아교육과 정미라 교수님, 토론자로 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은실 교수님, 김태현 아태인구연구원장님, 양성은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교수님,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대표님, 그리고 허선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외贵宾과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사회자를 비롯하여 이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토론회 |

육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과제



축사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미혁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 정책 토론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역대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1.05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그보다 더 낮아져 1.0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 합니다. 지난 2006년부터 10년 넘게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행해 왔지만 출산율 감소추세는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7월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책 주안점을 보육에서 ▲주거, ▲일·생활 균형 강화, ▲모든 아동과 가족에 지원 강화로 변화시켰습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소, 한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 확대 등으로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부모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설정한 것은 큰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산율’ 수치보다 ‘여성 고용율’과 ‘삶의 질 지수’에 초점을 두어 부모가 출산에 주저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먼저 만들겠다는 접근인 것입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뀐 만큼 육아정책에 대해서도 새로운 비전 제시가 필요합니다. 특히, 육아의 공공성 강화와 성평등 육아 문화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맞벌이 가정은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아이를 돌보아야 할 때입니다. 가정 내에서도 육아부담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함께 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 부모의 부담을 줄이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 모성권과 부성권을 동등하게 보호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스웨덴의 아빠 사진전 등 관련 주제로 토론회를 몇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욱 실효성 있는 육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토론회 |

육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과제



기조강연

초저출산 사회의 위기와 대응

- 새 정부의 저출산정책과 육아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포럼 TF 위원장)

포용적 복지를 위한 육아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2018. 11. 28.

'초저출산 사회의 위기와 대응: 새 정부의 저출산정책과 육아정책패러다임 전환의 방향

백 선 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

2017년

생산인구 감소의 원년

출생아수 40만 명의 붕괴(36만 명)

65세 이상 노인인구, 유소년 인구 수 역전

고령사회로의 진입(65세 이상 인구 14%)

...

2018년

합계출산율 1.0 붕괴, 32만명 이하

대한민국의 미래 지속가능성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은?



2016년 '한국의 지방 소멸 2018' 보고서

저출산·고령화에...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 '소멸위험'

* 2016년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소멸' 위기라 함

'소멸위험지수: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2013년 75개(32.9%) → 2014년 34.6% → 2015년 35.1% → 2016년 36.8% → 2017년 37.3% → 2018년 89개(39%)
* 전국 16개 광역시도별 중 전남(0.47)이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낮음

“최근의 소멸위험지역은 도청 소재지, 산업도시, 광역대도시로 확산되는 양상이며, 최근 지방 제조업의 위기는 지역의 산업기반을 붕괴시키면서 지방의 인구유출을 더욱 가속화했다”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물리적 인프라(하드웨어) 중심의 혁신뿐만 아니라, 교육, 교통, 주거, 문화 등과 관련된 생활양식(소프트웨어)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출처 : [출처] 이투데이: <http://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52001#csidxc96272c80c77b53994df9a229f2c4ad>

2017년

저출산에 '지방 소멸' 위기

1월에 태어난아기가 10명 미만인 시·군·구
(단위:명 출생자수)

경북 울릉	1
전북 무주, 경북 청송, 경남 남해	4
강원 고성	5
경남 의령	6
강원 양양	7
전북 진안, 경북 군위, 경북 영양	8

자료: 행정자치부

총 인구 5170만4332명

전국 시·군·구 10곳 1월 출생자 10명 미만
한 달 출생자(1월 기준)가 10명 미만인 시·군·구는
2015년 5곳, 2016년 8곳

2040년 인구증감 예측

■ 인구감소지역

■ 인구유지지역

■ 인구증가지역

출처 : 한경 2017.2.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21516301>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Q.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 시대.
대한민국의 적정인구 수는 약3천 만 명? 인구가 줄어야 되지 않을까?**



[인구절벽 20년, 일본의 교훈]
“인구 줄면 생산성도 후퇴...당장 저출산 대책 세워라”

일본 넷세이기초연구소 이코노미스트 야지마 야스히데

“한동안 일본에선 ‘인구가 줄어도 생산성이 높아지면 괜찮다’ 는 착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이 상태로 갈 경우 장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뒤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 “출산율을 회복한 프랑스를 보더라도 인구정책은 실행한 지 30년 정도가 지나야 비로소 성과가 납니다. 일본으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은 ‘나라 전체가 경각심을 갖고 하루라도 빨리 인구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 입니다.”

경향신문(2016.3.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3&artid=201603061824371#csidx1ea243b888f627aaa8aecf99eeb3eb4

내용

- I. 미래의 한국? 저출산·고령화의 국가, 일본의 사회경제적 쇼크
- II.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위기와 사회경제적 영향
- III. 저출산·고령화 위기에의 대응과 한계
- IV. 새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과 저출산정책 재구조화
- V. 육아정책의 중요성과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

BSH. 저출산정책과 육아정책 2018. 11. / 6



I. 미래의 한국? 저출산·고령화의 국가, 일본의 사회경제적 쇼크

BSH. 저출산정책과 육아정책 2018. 11. / 7

I. 미래의 한국? 저출산·고령화 국가, 일본의 사회경제적 쇼크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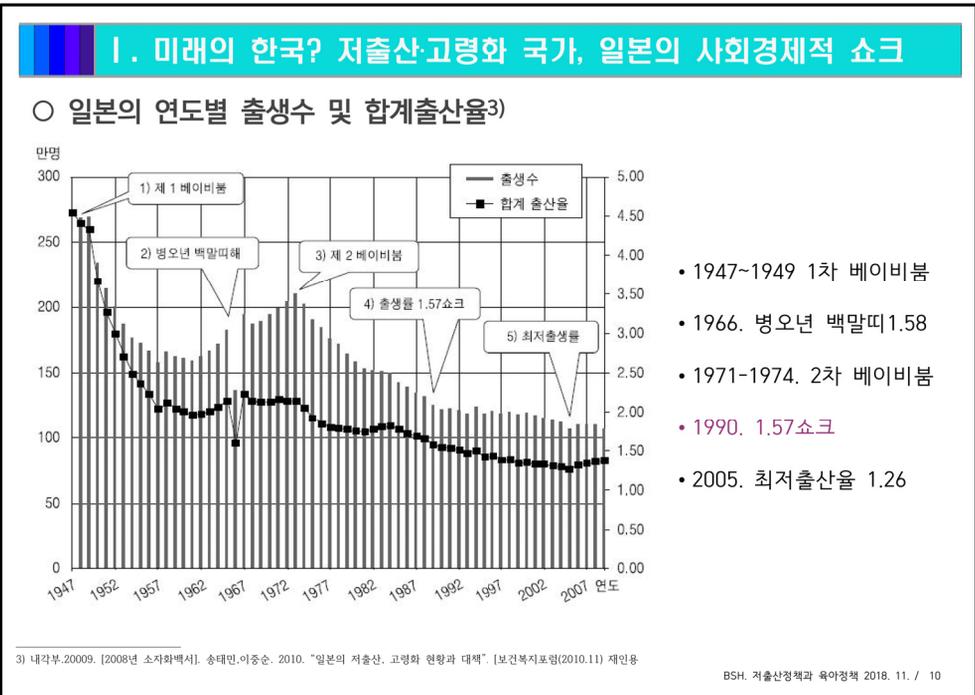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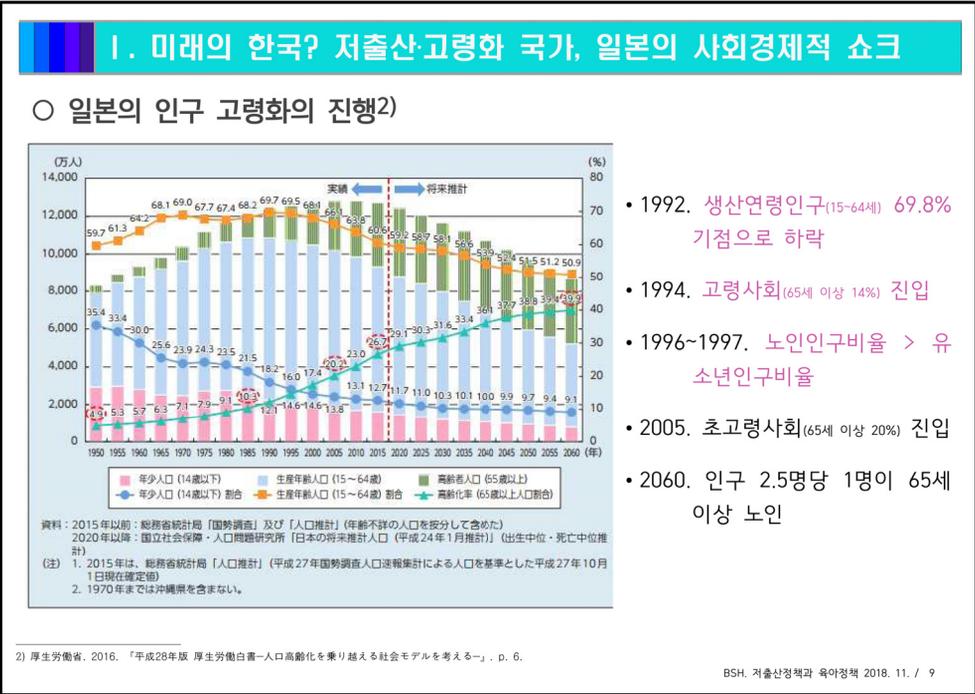
- 일본의 잃어버린 20년(1990~)의 배경
 - 1985년 Plaza 합의(3년간 엔화 50% 절상)
 - 엔 高 버블 → 주가, 부동산 폭등 → 금리 인상 → 거품 붕괴 25년

-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원인
 - 버블 충격 → 기업의 지출억제, **고령화와 인구 감소** → 내수 부진 → 침체 장기화
 - 고령화와 인구 감소: 1995년부터 경제활동 인구 감소, 2010년부터 인구 감소
 - 1995년~2013년 GDP성장률 0.9% (수요와 공급 모두 저하)

-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사회경제적 현황
 - 세대주 소득: 1990년 431천엔 → 2014년 415천엔 (0.96배)
 - 소비 지출: 1990년 332천엔 → 2014년 319천엔 (0.96배)
 - 근로소득세(2인 이상 가구) 1990년 24천엔 → 2014년 16천엔 (0.67배)

1) 김동원(2015),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고령화의 민낯_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국 Special』 강의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jT8u7lynFuc&list=PLgP5ab3A8M2Fboulx9JH5nSSoHD8mT1k&index=6>

BSH. 저출산정책과 육아정책 2018. 11. / 8



1. 미래의 한국? 저출산고령화 국가, 일본의 사회경제적 쇼크⁴⁾

○ 일본 인구구조의 변화: 베이비부머와 에코세대의 이동

Year	75 and over	65-74	20-64	19 and younger	Total Population	Dependency Ratio
1990	597 (5%)	892 (7%)	7,590 (61%)	3,249 (26%)	123.6 million	5.1
2010	1,407 (11%)	1,517 (12%)	7,497 (59%)	2,287 (18%)	128.1 million	2.5
2055	2,387 (27%)	1,260 (14%)	4,290 (48%)	1,067 (12%)	89.9 million	1.2

4) 김동원(2015),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고령화의 민낯_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국 Special』 강의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jT8u7lynFuc&list=PLgPSab3A8M2Fboukr9jHSnSSoHDRmTtk&index=6>

BSH. 저출산정책과 육아정책 2018. 11. / 11

1. 미래의 한국? 저출산고령화 국가, 일본의 사회경제적 쇼크⁵⁾

○ 일본 사회보장비의 변화: 연금, 의료비, 복지비

Year	Total expenditure (in ¥ trillions)
1950	0.1
1960	0.7
1970	3.5
1980	24.8
1990	47.2
2000	78.1
2009	99.9
2011	1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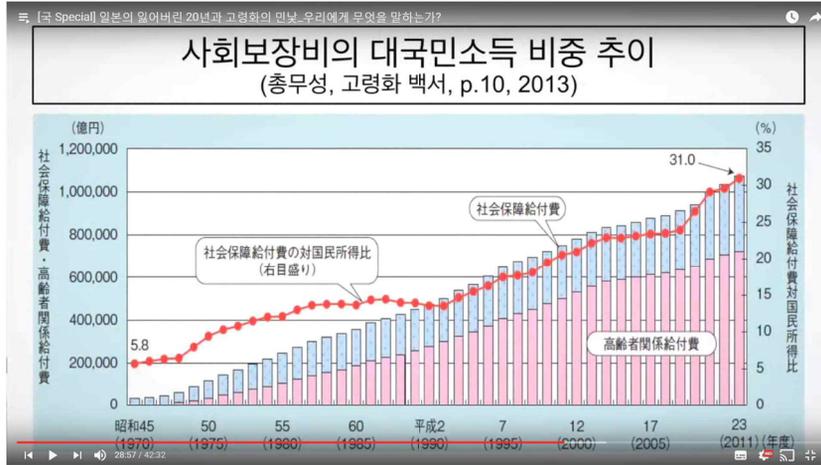
	1990	2011 (budget basis)
Total expenditure (in ¥ trillions)	47.2(100.0%)	107.8(100.0%)
(Details)		
Pension	24.0(50.9%)	53.6(49.7%)
Medical care	18.4(38.9%)	33.6(31.2%)
Welfare, etc.	4.8(10.2%)	20.6(19.1%)

5) 김동원(2015),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고령화의 민낯_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국 Special』 강의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jT8u7lynFuc&list=PLgPSab3A8M2Fboukr9jHSnSSoHDRmTtk&index=6>

BSH. 저출산정책과 육아정책 2018. 11. / 12

1. 미래의 한국? 저출산고령화 국가, 일본의 사회경제적 쇼크⁶⁾

○ 일본 사회보장비의 변화: 국민소득대비 비율



6) 김동원(2015),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고령화의 민낯-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국 Special』 강의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jT8u7lynFuc&list=PLgPSab3A8M2Fboulkr9jH5nSSoHDRmT1k&index=6>

1. 미래의 한국? 저출산고령화 국가, 일본의 사회경제적 쇼크

○ 일본 경기침체 장기화와 인구 고령화의 영향⁷⁾

- 노인부양비 증가(인구구조), 사회보장비 증가(연금, 건강보장비, 요양비, 복지비 등)
- 노인 빈곤화: 65세 이상 노인의 10% 이상이 빈곤
- 노인가구 증가: 전체 가구의 37%가 65세 이상 노인가구(노인 1인 가구 25%)
- 노인자살 증가: 고독사 연간 32천명
- 치매노인 증가: 65세 이상 노인의 15% 초기치매 (2025년 5명 중 1명, 700만명)
- 컨베이어식 행복보장시대는 끝났다: 학교 졸업 → 연애 → 취업 → 결혼 → 출산
- 초식남의 증가: 경제적 불안(취업과 소득) → 가족 부양 어려워 독신 불가피
- 결혼과 출산율 감소: 결혼하지 않고, 아이 낳지 않고, 아이 키우지 않고...
-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후루이치 노리토시, 2011): 사회 불만, 개인 행복
- 부자노인 → 低소비, 低조세, 高사회보장비(건강보험 등) → 경기침체 → 低성장
- 60세 이상인구가 총자산의 60%, 순금융자산의 80%(전체 가구의 1.7배) 보유
- 인구고령화 → 국가적 저소비·고비용 → 경기침체 → 저성장의 악순환

7) 김동원(2015),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고령화의 민낯-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국 Special』 강의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jT8u7lynFuc&list=PLgPSab3A8M2Fboulkr9jH5nSSoHDRmT1k&index=6>



I. 미래의 한국? 저출산·고령화 국가, 일본의 사회경제적 쇼크

- 아베총리의 인구정책 목표: 인구 1억명, 출산율 1.8명
 - 장관직 '1억총활약상' 신설(1억명은 현재인구의 약 80%)
 - 3개 화살: 강한 경제, 합계출산율 1.8명, 고령자 돌봄을 위한 이직 제도

한국은?

일본과의 비교⁸⁾



BSH. 저출산정책과 육아정책 2018. 11. / 15

II.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위기와 사회경제적 영향

8) 중앙선데이(2016.6.5). "정치인, 당장 성과 없다고 출산 정책 내뱉게서선 안 돼" (<http://news.joins.com/article/20128659>)

BSH. 저출산정책과 육아정책 2018. 11. / 16

II.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위기와 사회경제적 영향

- 인구보너스기의 종료, 인구오너스기로의 이행
 - 2017년, 생산인구 감소 시작, 2020년,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진입
 -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할 마지막 골든타임 5년(2016-2020)



자료: 대한민국정부(2016),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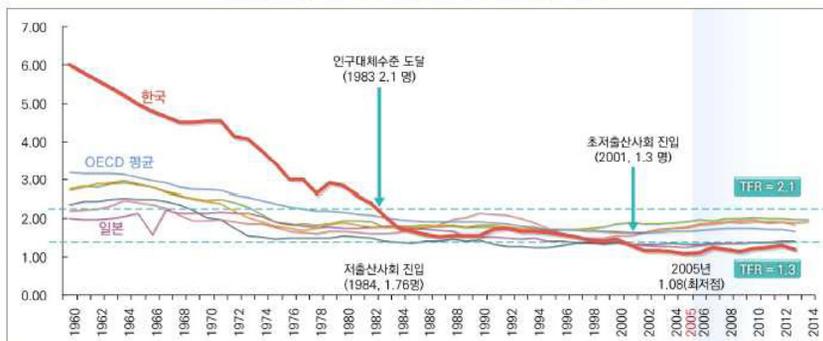
- 인구절벽 위기의 주요 원인은 ‘저출산’
 - 1970년의 합계출산율 4.53명, 출생아 수 1,006,645명
 - (45년 후) 2015년의 합계출산율 1.24명(72.6% 감소), 438,700명(56.4% 감소)⁹⁾

9) 통계청, <http://kosis.kr/statPopulation/main.jsp> (다운로드 2016. 8. 11)

II.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위기와 사회경제적 영향

- 세계에서 유래 없는 초저출산 국가
 - 저출산사회 진입 1984년, 초저출산사회 진입 2001년
 - 우리나라 최저이면서 세계 최저수준의 기록 2005년 1.08, 2018년 1.0 붕괴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자료: 통계청, 출생통계; OECD Family Database, 2015.



II.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위기와 사회경제적 영향

- 초저출산 경험 국가: 11개국
 - 초저출산 상태의 최장 유지 국가: 한국(2018년 현재 18년째 지속)
 - OECD국가 중 초저출산 국가: 한국이 유일¹⁰⁾

〈 초저출산현상(합계출산율 1.3명 미만 경험 국가) 〉

국가	인구대체수준 (약 2.1명)도달시기	TFR 1.3 도달시기	TFR 1.3미만 지속기간	최저수준	최근 TFR
한국	1983	2001	14년(2001~현재, 2014년 기준)	1.08(2005)	1.21(2014)
이탈리아	1977	1993	11년(1993~2003)	1.19(1995)	1.39(2013)
독일	1970	1992	4년(1992~1995)	1.24(1994)	1.41(2013)
일본	1960/1974	2003	3년(2003~2005)	1.26(2005)	1.43(2013)

자료: 통계청, 출생통계; OECD Family Database, 2015.

10) 대한민국정부(2016),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II.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위기와 사회경제적 영향¹¹⁾

-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 (노인인구)
 - 2015년 662만명 → 2030년 1,269만명(2배) → 2050년 1,800만명(3배)

〈 인구피라미드 변화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7

-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
 - 2050년 노인인구비율 37.4%(일본에 이어 2위), 2060년에는 1위(40%)
 - 평균수명은 2007년부터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최장수 국가군
 - 1970년 61.9세(남 58.7세, 여 65.6세)
 - 2014년 81.5세(남 78.0세, 여 84.8세), 90세 이상 16만명(2015)
 - 2060년 88.6세(남 86.6세, 여 90.3세), 90세 이상 200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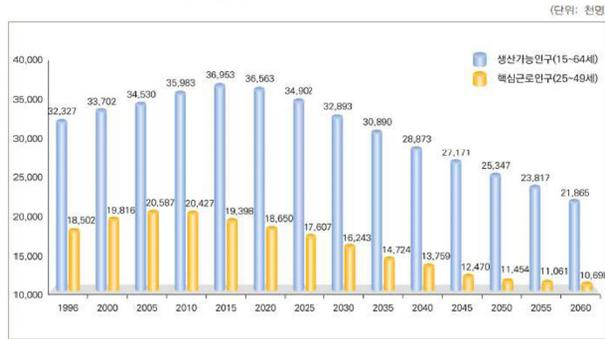
11) 대한민국정부(2016),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II.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위기와 사회경제적 영향

○ 노동력 부족과 노동력의 고령화¹²⁾

- 총량적 인력 부족: 베이비붐 세대 은퇴, 저출산 지속
- 노동력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평균 연령이 2015년 40.3세 → 2030년 42.9세

〈생산가능인구와 핵심근로인구의 장래 추계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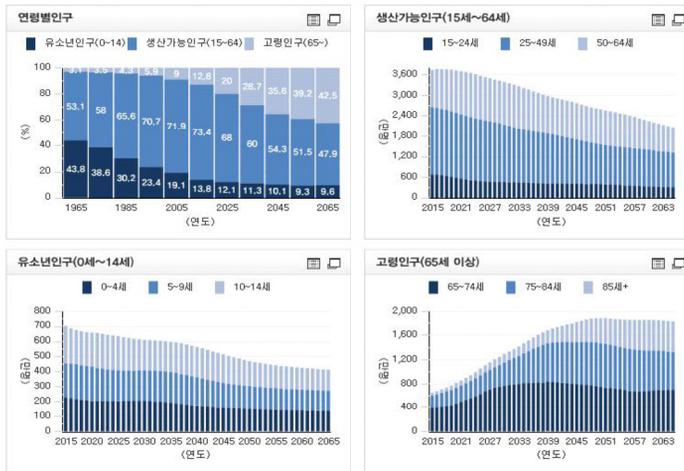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12) 대한민국정부(2016),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II.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위기와 사회경제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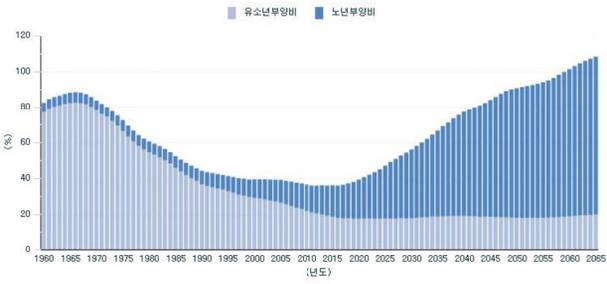
○ 우리나라 미래 인구구조의 변화: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 비중



통계청 Copyright Statistics Korea. All rights reserved.

II.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위기와 사회경제적 영향

○ 우리나라 미래 인구구조의 변화: 유소년 부양비, 노년부양비



항목/년도	2015	2025	2035	2045	2055	2065
총부양비	36.24	47.14	66.79	84.19	94.21	108.66
유소년부양비	18.77	17.75	18.88	18.6	18.16	20.04
노년부양비	17.47	29.39	47.91	65.59	76.05	88.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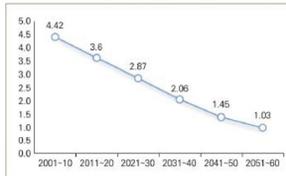
BSH. 저출산정책과 육아정책 2018. 11. / 23

II.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위기와 사회경제적 영향

○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위기¹³⁾

- **경제: 잠재성장률 하락** - 소비 감소, 투자 감소, 노동력 감소, 노동생산성 감소
 - 연평균 경제성장률 2001~2010년 4.42% → 2051~2060년 0.99% 전망
- **사회보장비 증가: 연금 지출 증가, 보건의료비 증가, 사회보장지출비 증가**
 - 공공복지지출: GDP대비 2013년 9.8% → 2040년 OECD 평균(21.4%,2011) → 2060년 29.0%
 - 2011년: 한국 9.0%, 스웨덴 27.2%, 프랑스 30.1%, 독일 25.5%, 미국 19.0%, 일본 23.1%

〈연평균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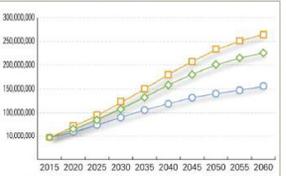


자료: 경제시스템분석학회, 2014.

〈국민연금 기금적립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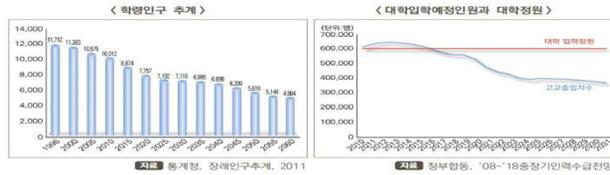
〈건강보험재정수지 전망〉



BSH. 저출산정책과 육아정책 2018. 11. / 24

II.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위기와 사회경제적 영향

- **재정수지 악화:** 총수입 증가, 조세 감소, 복지지출 등 증가
 - 국가채무비율 2014년 35.9% → 2060년 64.2%
- **노후소득 불안:** 49.6%(OECD 노인빈곤율, 상대빈곤)
 - 노인빈곤율(2014): OECD 평균 12.6%, 일본 19.4%, 독일 9.4%, 스웨덴 9.3%
 - * OECD 노인빈곤율: '65세 이상 인구 중 가처분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비율(가처분 소득: 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 사회적전소득, 부동산 미발영)
 - 공적연금액이 노후생활소득에 차지하는 비율 45% 이하 (자산 50% 처분시 60%)
- **학력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인프라 공급과잉:** 초·중고 폐교, 대학 정원 미달



- **병역자원 부족:** 21개월 복무 기준, 30년대 초반까지 2.3만명 부족
- **농촌 공동화:** 인구공동화: 인구 2008년 518만명에서 2053년 282만명으로 급감

BSH. 저출산정책과 육아정책 2018. 11. / 25

III. 저출산·고령화 위기에의 대응과 한계

BSH. 저출산정책과 육아정책 2018. 11. / 26



Ⅲ. 저출산·고령화 위기에의 대응과 한계

- 고령화의 원인: 저출산, 평균 수명 연장(건강관리, 사회보장, 의료기술 발달)
- 저출산의 원인(결혼·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고: 1. 네오 도식은 거시적 차원의 요인, 흰 도식은 미시적 차원의 요인을 의미함
 2. 외곽의 실선은 거시적 사회구조를 의미함
 자료: 이상식·최효진·계봉오·김경근·기동식·서문희·윤자영·이상협·이윤석·천현숙, 2016, 『결혼·출산 형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BSH. 저출산정책과 육아정책 2018. 11. / 27

Ⅲ. 저출산·고령화 위기에의 대응과 한계

- 결혼·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인
 - 생식보전 문제, 주택 소유욕, 가족 가치관 변화, 돌봄 공백, 양성불평등 문화, 결혼·출산·양육 비친화적 노동환경, 노동시장 학력 차별, 고학력화와 학력 인플레이션
- 각 거시적 요인에서 파생된 미시적 요인
 - 생식보전 문제: 고위험 임신 증가, 임신 소모 발생
 - 주택 소유욕: 주택마련 곤란, 주거비 부담
 - 가족 가치관 변화: 결혼 기피, 무/소자녀 선호, 자녀 질 중시
 - 돌봄 공백: 돌봄 부담 증가
 - 양성불평등 문화: 일가정 양립 곤란
 - 결혼·출산·양육 비친화적 노동환경: 일가정 양립 곤란
 - 노동시장 학력 차별: 결혼/출산 시 고용 불안정
 - 고학력화와 학력 인플레이션: 교육비 부담 증가, 교육직업간 연계 곤란, 입직연령 상승, 경제활동 계약

BSH. 저출산정책과 육아정책 2018. 11. / 28

Ⅲ. 저출산·고령화 위기에의 대응과 한계

○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 정책 목표: 저출산 문제 해결로 인구 급감 예방



BSH. 저출산정책과 육아정책 2018. 11. / 29

Ⅲ. 저출산·고령화 위기에의 대응과 한계

○ 2004년, 국정 아젠다화와 저출산 위기 대응의 시작

- 2004. 저출산·고령화 문제 국정 의제 설정
- 2004. 대통령직속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 200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 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06~'10)
- 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1~'15)
- 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6~'20)
- 2017.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개선기획단('17 상반기)
- 201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국('17 하반기)
- 2018.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전략 발표('18 11 발표 예정)

BSH. 저출산정책과 육아정책 2018. 11. / 30



III. 저출산·고령화 위기에의 대응과 한계

○ 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06~'10)¹⁴⁾

- 비전: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발전 가능사회 구현
- 목표: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 조직: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1차 기본계획 ('06~'10) : 4대 분야 237개 과제 추진

분 야	중점 과제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환경조성 (총 96개)	영유아 보육·교육비지원 확대, 병과후 학교 확충, 양질의 육아 인프라 확충, 육아휴직 활성화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총 66개)	공적연금 개혁 추진,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등을 통한 다층 소득보장체계 구축, 요양인프라 확충 , 노인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총 71개)	여성,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평생학습체계 구축, 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총 4개)	정부, 기업, 노동 등 사회주체들과 정책 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14) 대한민국정부(2016),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BSH. 저출산정책과 육아정책 2018. 11. / 31

III. 저출산·고령화 위기에의 대응과 한계

○ 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1~'15)¹⁵⁾

- 비전: 저출산·고령사회에 성공적인 대응을 통한 **활력 있는 선진국가** 도약
- 목표: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
- 조직: 보건복지부장관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2차 기본계획 ('11~'15) : 3대 분야, 231개 과제 추진 중

분 야	중점 과제	
저출산 분야 (총 95개)	일·가정양립 일상화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유연한 근로형태 확산 등
	결혼, 출산부담 경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확대 등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드림스타트 활성화,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중장기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고령사회 분야 (총 78개)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임금피크제 활성화, 퇴직연금제도 조기 정착, 노후준비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등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노인일자리 확대 , 농지연금 도입, 노인질병 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고령친화 사회환경 조성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 공급,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등
성장동력 분야 (총 58개)	잠재인력 활용기반구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외국적 동포 및 외국인력 활용,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등
	인구조조 변동에 대응한 경제사회제도 개선	교원양성 및 수급계획 재수립,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 수립,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 등
	고령친화제품 육성	고령친화제품 사용자 평가시스템 개발, 지역사회밀착형 진사·체험단 운영 등

15) 대한민국정부(2016),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BSH. 저출산정책과 육아정책 2018. 11. / 32

III. 저출산·고령화 위기에의 대응과 한계

○ 제1,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투입 자원¹⁶⁾

- 제1차 계획: 약42조
- 제2차 계획: 약101조

(단위 : 조원)

구 분	총계	제1차 기본계획('06~'10)						제2차 기본계획('11~'15)					
		계	'06	'07	'08	'09	'10	계	'11	'12	'13	'14	'15
총계	152.1	42.2	4.5	5.9	8.4	11	12.4	109.9	14.4	18.9	21.5	25.5	29.6
저출산	80.2	19.7	2.1	3.1	3.8	4.8	5.9	60.5	7.4	11	13.5	13.9	14.7
고령화	56.7	15.9	1.3	1.6	3.2	4.7	5.1	40.8	5.5	6.4	6.3	9.7	12.9
성장동력	15.3	6.7	1.1	1.3	1.4	1.5	1.4	8.6	1.5	1.5	1.7	1.9	2

주 지방비포함. '06~'13년은 실적행액, '15년은 예산액 기준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예산 투입했지만, 효과 없었다는 비판 ...¹⁷⁾
 저출산 문제는 취업, 결혼이 늦어지는 문제와 문화, 철학적 측면이 녹아있다(김락흥의원)

16) 대한민국정부(2016),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17) 뉴스투마토(2016.7.21.), "효과없는 저출산 정책, 이제는 바뀌어야"

III. 저출산·고령화 위기에의 대응과 한계

○ 제1,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성과: 합계출산율 중심¹⁸⁾

- 제1차 계획: 2005년 1.08명 -> 2010년 1.23명
- 제2차 계획: 2010년 1.23명 -> 2015년 1.23명

〈 주요 저출산대책과 합계출산율 〉



자료 합계출산율은 통계청 KOSIS (*2015년은 보사연 추정치)

18) 대한민국정부(2016),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III. 저출산·고령화 위기에의 대응과 한계

○ 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6~'20)¹⁹⁾

비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의 구현	
목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합계출산율: ('14) 1.21~('20) 1.5명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 노인빈곤율: ('14) 49.6~('20) 39%
추진 전략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 청년고용 활성화 ▶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노후 소득보장 강화 ▶ 1인 1국민연금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 ▶ 주택연금 등 활성화로 노후보장수준 제고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실현 ▶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적 지원 확대 ▶ 포용적 가족형태 인식 확산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 간병·치매·호스피스 등 의료·돌봄 강화 ▶ 고령자 교통·생활안전 환경 조성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 맞춤형 보육·돌봄 확대 ▶ 자녀와 부모가 행복한 교육개혁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 여성·고령친화 고용시스템 전환 ▶ 사회통합적 외국인력 활용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 양성이 평등한 일·가정양립 ▶ 중소기업·비정규직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 분야별 인구 대응사이징 대비 ▶ 고령친화산업의 발전 생태계 조성

19) 대한민국정부(2016).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BSH. 저출산정책과 육아정책 2018. 11. / 35

III. 저출산·고령화 위기에의 대응과 한계

○ 제3차 저출산 대책의 내용에 대한 평가

- 제3차 계획 중 새로운 정책 분야는 청년고용 및 주거정책의 구체성 미흡²⁰⁾
 - 청년고용정책에는 비정규직 문제, 저임금 구조의 개선, 공공일자리창출정책 등의 적극조치 부족
 - 청년주거정책에는 주거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만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구체성 부족
 - 일·가정 양립정책에는 육아휴직의 내실화, 공적 육아인프라 마련 등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
- 제3차 저출산 대책의 한계: 20~30대 청년기의 특성 반영 미흡²¹⁾
 - 20대 여성들의 현실: 일은 필수, 결혼은 선택, 일·가정 양립 중요
 - 20대 남성들의 현실: 첫 취업 26.7세, 대졸후 2.3년의 취업준비²²⁾, 결혼비용 부담
 - 2016년 청년실업률은 20대 초반이 10.1%, 20대 후반이 9.3%, 비정규직 비율이 32%²³⁾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수준 대기업정규직의 34.6%(2014), 청년층 취업애로계층은 116만 명(2015.6)²⁴⁾
 - 한 쌍의 평균 결혼비용은 2억 원 이상, 비용의 대부분은 주거비용
 - 결혼은 선택이라는 인식 확산, 결혼보다 일을 중요시하는 경향, 결혼은 경제적 안정 후

20) 백선희(2016). 『저출산 극복의 마지막 기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다미래연구소
 21) 백선희(2016)의 『저출산 극복의 마지막 기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다미래연구소)의 내용의 일부임. 일부 수정함.
 22) NH투자증권(2016). 『2016년 대한민국 직장인 보고서』, 직장인 1152명 설문조사, 2016년 5월 실시(출처: 데일리뉴스, 2016. 5. 24. "연보그래픽 vol.216,2016년 대한민국 직장인의 일상. 첫 취업 연령, 준비기간, 해고대상, 승진요소 등" http://www.datanews.co.kr/news/article.html?no=94275)
 23) 통계청(2016). 고용통계자료 참고(http://kosis.kr 다운로드 2016. 8. 11)
 24) 대한민국정부(2016).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BSH. 저출산정책과 육아정책 2018. 11. / 36

IV. 새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과 저출산정책 재구조화

BSH. 저출산정책과 육아정책 2018. 11. / 37

IV. 새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과 저출산정책 재구조화

○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²⁵⁾

국가비전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5대 국정목표	국민주권의 춧물민주주의 실현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
20대 국정전략	소통으로 통합하는 관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골고루 잘사는 균형 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 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대 국정과제	15개	26개	32개	11개	16개

25)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BSH. 저출산정책과 육아정책 2018. 11. / 38



IV. 새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과 저출산정책 재구조화

○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관계: '소득주도성장'과 '황금삼각형'²⁶⁾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관계: '소득주도성장' 과 '황금삼각형'

성장, 고용, 복지의 '황금삼각형'
golden triangle

-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대립한다는 기존의 관념을 극복하고
- '거시경제정책' ↔ '노동시장 안정화'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관대한 복지제도'의 결합을 통해 **성장, 고용, 복지의 선순환 관계 형성**
- 노동시장이 안정화되어야 복지비용을 줄일 수 있고(사각지대), 복지제도가 잘 구축되어야 노동시장이 안정화 됨.
-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① 복지의 유효수요 창출, 유지. ② 사회투자 social investment 를 통한 노동력의 양과 질 유지
 - 복지가 수요를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개방경제(한국)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음.

※복지비 지출의 국민경제적 효과 조사 필요

26) 김연명(2017). "문재인정부 사회정책 비전과 정책". 보건복지부강의자료(2017.8.9.)

BSH. 저출산정책과 육아정책 2018. 11. / 39

IV. 새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과 저출산정책 재구조화

4대 복합·혁신 과제 중: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²⁷⁾

○ 과제개요

- **초저출산* 현상 지속에 따라 향후 5년은 인구절벽위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서 전 사회적 총력 대응 필요**
 - * '16년 출생아 수는 40.6만명으로 역대 최저, '17년 출생아 수 36만명대 급락 우려
- 초저출산 탈피 및 출생아 수 45만명(출산율 1.4) 회복, 자녀 양육·교육의 국가책임 시스템 구현, 일·가정 양립 일상화 등

○ 주요 내용

-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책임시스템 구현
-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Hi-Five, 5대 개혁 어젠더)
- 전 사회적 총력대응체제 강화

27)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BSH. 저출산정책과 육아정책 2018. 11. / 40

IV. 새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과 저출산정책 재구조화

- ①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책임시스템 구현
 -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립
 -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투자 강화
 -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 ②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Hi-Five, 5대 개혁 어젠더)
 - 안정된 청년 일자리 확대
 - 주거 공공성 강화
 - 성평등 문화 정착
 -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 ③ 전 사회적 총력대응체제 강화
 - 대통령 주도 상시 운영체제 전환 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 실질화
 - 과감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재원 확충 노력, 국가 인구연구기관 등 신설
 - 인구감소지역 저출산 극복 노력 유도를 위한 지원방안·제도 등 마련

BSH. 저출산정책과 육아정책 2018. 11. / 41

IV. 새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과 저출산정책 재구조화

○ 이행목표·계획

- 1단계('17년~'18년) : 주요대책 시행, 컨트롤타워 강화
 - 청년구직수당, 공공임대 확대, 아동수당, 초등완전돌봄체계 구축,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0 to 4) 등 주요 대책 시행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능·역할 강화, 전담사무국 설치
- 2단계('19년~'20년) : 주요대책의 단계적 확대, 성과 창출
 - 청년고용의무제 확산,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근로시간 단축 정착 등
- 3단계('21년~'22년) : 주요 정책목표 달성 및 초저출산 탈피
 - 비정규직 등 청년고용대책 지속 보완,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확충 목표 달성, 공보육·유아교육 40% 원성, 일·가정 양립 지원체계 개편 완료

BSH. 저출산정책과 육아정책 2018. 11. / 42



IV. 새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과 저출산정책 재구조화²⁸⁾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2018. 09. 11.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 관계부처 합동

28)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BSH. 저출산정책과 육아정책 2018. 11. / 43

IV. 새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과 저출산정책 재구조화²⁹⁾

문재인정부 사회정책 비전과 전략

문재인정부 사회정책비전 : 3대 비전 9대 전략

- 사회정책 강화로 한국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 구축
- 포용은 혁신능력을 높이고 기술혁신의 결과(배제)를 보완해주는 상보적 관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비전</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전략</p> </div>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10px; border-radius: 10px; text-align: center;"> <p>포용 Inclusiveness</p> <p style="font-size: x-small;">재래적 강화·국가 권위 계급 이동 중단의 사회적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제고</p> </div> <p style="font-size: x-small; text-align: center;">상호보완</p> <div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10px; border-radius: 10px; text-align: center;"> <p>혁신 Innovation</p> <p style="font-size: x-small;">중심한 사회정책은 개인·기업혁신 사회제도 혁신의 기반</p> </div>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5px; border-radius: 10px; text-align: center;"> <p>사회통합 강화</p> </td> <td style="padding: 5px;"> <p>전략 1: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 산업, 고용, 인구변화에 대응한 2차 분배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p>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5px; border-radius: 10px; text-align: center;"> <p>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p> </td> <td style="padding: 5px;"> <p>전략 2: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 노동시장, 전도, 교육, 주거 적자 해소를 위한 기회 균등</p> <p>전략 3: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p>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5px; border-radius: 10px; text-align: center;"> <p>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p> </td> <td style="padding: 5px;"> <p>전략 4: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 저출산 정책 방향 전환 및 고령사회 대비 사회제정의 합리화</p> <p>전략 5: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의 양과 질 개선 및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충</p> <p>전략 6: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재산의 존중 - 예방적 환경정책, 여성 안전사회, 재해 등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p> </td> </tr> <tr> <td></td> <td style="padding: 5px;"> <p>전략 7: 인적 자원의 창의성·다양성 증진 - 조중증·고등교육 혁신, 문화를 통한 혁신 능력 고양</p> <p>전략 8: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중심의 일터 혁신 - 평생학습, 직업능력개발 강화와 기업문화 개선</p> <p>전략 9: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 산업변화에 따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실업 시 소득보장 강화</p> </td> </tr> </table>	<p>사회통합 강화</p>	<p>전략 1: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 산업, 고용, 인구변화에 대응한 2차 분배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p>	<p>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p>	<p>전략 2: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 노동시장, 전도, 교육, 주거 적자 해소를 위한 기회 균등</p> <p>전략 3: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p>	<p>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p>	<p>전략 4: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 저출산 정책 방향 전환 및 고령사회 대비 사회제정의 합리화</p> <p>전략 5: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의 양과 질 개선 및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충</p> <p>전략 6: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재산의 존중 - 예방적 환경정책, 여성 안전사회, 재해 등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p>		<p>전략 7: 인적 자원의 창의성·다양성 증진 - 조중증·고등교육 혁신, 문화를 통한 혁신 능력 고양</p> <p>전략 8: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중심의 일터 혁신 - 평생학습, 직업능력개발 강화와 기업문화 개선</p> <p>전략 9: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 산업변화에 따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실업 시 소득보장 강화</p>	<div style="text-align: center;"> <p style="color: #0056b3; font-weight: bold;">지속가능성과 사람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혁신적 포용국가</p> </div>
<p>사회통합 강화</p>	<p>전략 1: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 산업, 고용, 인구변화에 대응한 2차 분배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p>									
<p>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p>	<p>전략 2: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 노동시장, 전도, 교육, 주거 적자 해소를 위한 기회 균등</p> <p>전략 3: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p>									
<p>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p>	<p>전략 4: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 저출산 정책 방향 전환 및 고령사회 대비 사회제정의 합리화</p> <p>전략 5: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의 양과 질 개선 및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충</p> <p>전략 6: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재산의 존중 - 예방적 환경정책, 여성 안전사회, 재해 등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p>									
	<p>전략 7: 인적 자원의 창의성·다양성 증진 - 조중증·고등교육 혁신, 문화를 통한 혁신 능력 고양</p> <p>전략 8: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중심의 일터 혁신 - 평생학습, 직업능력개발 강화와 기업문화 개선</p> <p>전략 9: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 산업변화에 따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실업 시 소득보장 강화</p>									

32

29)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BSH. 저출산정책과 육아정책 2018. 11. / 44

IV. 새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과 저출산정책 재구조화³⁰⁾

사회정책비전2: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4: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예상을 넘어 급락하는 출생아수(2017-2018)



노인인구비율 변화 국제 비교(2030-2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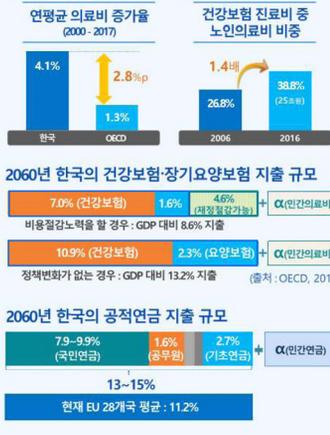
- 2017년 출생아 수가 통계청 추계치 2035년 수준(35.8만)으로 급락하여 18년이 앞 당겨졌고 중국, 일본과 비교할 때 '재앙적' 수준의 인구절벽 직면
- 주거, 교육, 돌봄육아 등 결혼·출산의 높은 기회 비용, 청년세대의 가치관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혼인 감소와 출산 급락
-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하되, 동시에 아동과 청소년 개인을 **청의적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교육·사회적 환경 조성
- 한국의 노인인구 비중은 2030년을 기점으로 선진국을 추월하고 2060년 이전에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
- 한국 노인의 삶의 질은 사회관계망, 빈곤율, 건강상태 등에서 최하위 수준이며 단독가구 증가(2008년 19.7% → 2017년 23.6%)로 더 악화 예상
- 노인은 보호 대상이자 인구감소기에 **소비와 생산의 주체**로 설정하는 새로운 시각 필요

30)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IV. 새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과 저출산정책 재구조화³¹⁾

사회정책비전2: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4: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 의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노인의료비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지 않으면(1차 공공의료 및 공공요양서비스 강화 등) 상당한 재정적·사회적 부담 예상(건강보험 진료비 중 요양병원 진료비의 비중 2005년 0.3% → 2016년 9.4%)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비용은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2060년 GDP의 13.2%를 지출하나 비용절감 노력 시 8.6% 수준으로 4.6%p 감소 가능(OECD, 2015)
- 공적연금지출은 2060년 13~15%로 현재의 유럽 수준에 도달하나 노인인구비율은 EU 평균 29%, 한국 41%로 12%p 높을 것으로 추정
- 주력 소비층인 청장년층의 인구 감소 상황에서 총인구의 41%에 달하는 1천 9백만명의 노인들이 적절한 수준의 소비를 하지 않으면 상당한 내수 위축 발생, 연금지출은 적정 수준을 유지할 필요

31)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IV. 새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과 저출산정책 재구조화³²⁾

사회정책비전2: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4: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기존 정책패러다임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저출산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물학적 출산율과 출생아 수 상승에만 초점을 둔 보육지원 중심의 단선적 정책 ② 이상적 가족모델로서 핵가족을 전제로 한 국가주도의 캠페인과 여성을 출산의 수단으로서 도구화 ③ 고착된 성불평등 개선 없이 여성에게 책임 전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년주거 개선, 근로시간 단축, 기업의 출산친화적 문화 조성 등 2040세대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 ②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③ 성평등적 사회기업 문화의 적극적 조성
고령사회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부의 재정건전성 관점에서 공적연금, 건강보험비용 억제에 과도한 초점, 가계 지출 사적연금-사적의료비에 대한 무관심 ② 베이비 버머 등 주력 소비층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공적연금의 내수 유지 가능 과소 평가 ③ 고령층을 보호의 대상으로 상정해 4050세대 등 미래 노인의 인적 역량 축적의 중요성 미인식, 굵고 짧은 생애주기로 설계된 고용시스템으로 인한 고령자 차별적인 고용제도와 관행 ④ 건강한 노후생활환경 조성 미흡, 건강관리, 노인 친화적 주거, 활동적 노인 사회관계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적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공공재정과 기계부담까지 고려한 증비용의 합리화 모색, 특히 공적사적의료비 총량과 노인의료비 합리화가 중요 ② 주력 소비 인구의 감소를 대체할 수 있는 공적연금의 내수 유지 가능에 대한 인식 전환 ③ 4050세대의 인적역량강화 정책 체계화, 고령자가 차별 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고용시스템 구축(긴 생애주기 고용시스템 설계, 정년연장 및 관련 지원 임금체계개선 등) ④ 건강한 노후는 고령화 비용 합리화의 주요 수단, 건강주거·사회안전망을 노인친화적으로 재편

32)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BSH. 저출산정책과 육아정책 2018. 11. / 47

IV. 새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과 저출산정책 재구조화³³⁾

○ 저출산대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재구조화

- 문재인정부의 저출산및고령사회위원회 발표, 새 정부의 정책 방향
- 개인의 삶과 선택을 존중하는 '사람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출산율, 출생아 수를 목표로 하는 정책에서 탈피해 미래를 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구조개혁 하겠습니다.

1. 일·생활 균형: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 아이·부모가 함께, 더 많은 시간 지원
 - 장시간 근로 →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확보
- 아빠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육아
 - 독박 육아 → 아빠, 엄마가 함께하는 평등 육아
- 영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 아이 행복, 부모 안심 돌봄
 - 돌봄 공백 → 사회적 돌봄 확립(가족, 학교, 기업, 지역사회, 국가 공동)

3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betterfuture.go.kr/pc/dire/dire1.php>

BSH. 저출산정책과 육아정책 2018. 11. / 48

IV. 새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과 저출산정책 재구조화³⁴⁾

2.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일자리: 여성의 꿈 실현

- 양질의 여성 일자리 확충 (경제활동 진입)
 - 질 낮은 일자리, 성별 임금 격차 → 양질의 일자리, 임금 격차 완화
- 여성의 재취업 지원 강화 (경력단절 해소)
 - 경력단절 → 재취업을 통한 자아실현

3. 3대 구조개혁 희망 회복 프로젝트

- 고용: 청년 일자리 확충
 - 일자리 대책 + 3차 기본계획 보완
- 주거: 주거의 공공성 강화
 - 주거복지 로드맵 + 3차 기본계획 보완
- 교육: 공교육 강화
 - 공교육 투자 확대, 사교육 부담 경감

3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betterfuture.go.kr/pc/dire/dire1.php>

IV. 새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과 저출산정책 재구조화³⁵⁾

4. 모든 아동과 가족 지원 아동의 밝은 미래 보장

-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의 사회적 지원 강화
- 태어난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
- 임신부와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이 존중받는 사회적 여건 조성

3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betterfuture.go.kr/pc/dire/dire1.php>

IV. 새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과 저출산정책 재구조화³⁶⁾

○ 문재인정부의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추진계획(안)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작업 중, 구체적 내용 2018. 11 발표 예정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과 출생아 수를 목표로 하는 국가 주도 출산정책 →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활중심 정책**

정책 변화 방향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목표	2040세대의 삶의 질
집근방식	제도·구조 개혁 → 개인의 할라치 선택
타겟대상	청년, 아동, 여성, 영차 중산층, 초개층
정책	주거, 일·생활균형(워라벨) 강화 / 오피스 출생 부흥

3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betterfuture.go.kr/pc/dire/dire1.php> BSH. 저출산정책과 육아정책 2018. 11. / 51

IV. 새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과 저출산정책 재구조화³⁷⁾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5대 정책과제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출생 아동) 출생후기급에 사각지대 해소, 아동 출생 후 3년간 건강보험 전연비 제도화

(영유아·초등학교) 출생한 초등학교, 공부의 자유, 가정·공동체 돌봄 강화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아이 함께) 일과 식감없는 육아기 근무시간 1시간 단축

(아이 함께) 남성 육아휴가·유치 사용 확산

(중소기업 협력) 청년이 일하고 싶은 워라벨 중소기업 확산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평등한 지원

(평등 지원)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

(비혼 출산·영양) 다양한 가족이 어울려 사는 여건 확립

청년의 평등한 출발지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 방안/ 청년일자리, 청년대책은 별도 수립

제대로 쓰는 재정, 효율적 행정지원 체계

3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betterfuture.go.kr/pc/dire/dire1.php> BSH. 저출산정책과 육아정책 2018. 11. / 52

IV. 새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과 저출산정책 재구조화³⁸⁾

출생부터 부담없이 지원

출산급여 사각지대 해소

-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여성 대상으로 90일간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90일간 월 50만원

임산부 부담경감

- 고유월 산모 비급여 입원료비 절감 (5 → 11개)

비급여 입원료비 절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인행) 기준중위소득 80% → '19) 100%

기준중위소득 80% → 100%

1세 아동 의료비 제로화

- 외래진료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 국민행복카드 지원 확대
- 지원금액 10만원 인상(50→60만원)
- 사용기간 확대(출산일 이후 1년까지)

지원금액 50만원 → 60만원

영유아부터 공백없는 돌봄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

어린이집

- 국 공립 매년 450개소 이상, 직장 매년 135개소 이상 확충

유치원

- 5년('18~'22년)간 국 공립 학급 2,600개소 이상 추가 신설

민족도 채고

- 어린이집 평가제 의무화(평가인증 → 평가제) 및 어린이집 유지권 공통평가 실시

가정·공동체 돌봄으로 사각지대 보완

아이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확대, 요금부담 완화, 돌보미 공급확대, 실시간 신청 대기 관리시스템 구축

공동육아나눔터

- 육아소통공간 확대 및 은퇴교원 등을 활용한 돌봄공동체 조성

지역관리

- 아이돌봄 서비스 품질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국가자격제도 도입 검토

학교 언택트 온종일 돌봄 확대

학교돌봄

- 학교내 돌봄공간 확충 및 대상 전 학년으로 확대

마을돌봄

- 보편적 돌봄지원으로 범위확대, 지역공공시설을 활용한 '다함께 돌봄' 추진

3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betterfuture.go.kr/pc/dire/dire1.php> BSH. 저출산정책과 육아정책 2018. 11. / 53

IV. 새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과 저출산정책 재구조화³⁹⁾

아이함께

- 임금 삭감 없는 일 1시간 근로단축 추진(최대 2년간 허용) *그림1

아빠함께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 "아빠 육아휴직 최소 1개월" 사용기업 확산
- 소득대체율 상향(상한 200 → 25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그림2
- 육아휴직 부모 동시사용 가능

중소기업 함께

- 중소기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인상
- 일생활형 우수기업 육성
- 위리얼 종합지원서비스 구축, 근로감독 강화

그림1 근로시간 단축

현행

- 단축시간: 월2~5시간(주10~25시간)
- 사용시간: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1년
- * 육아휴직 1년 사용시 근로시간 단축 불가
- 임금지원: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개선

- 단축시간: 월1~5시간(주5~25시간)
- 사용시간: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2년
- * 기존 1년 + 육아휴직이 사용기간 - 최대 2년
- 임금지원: 최소 70%/일 단축 시, 통상임금 100%(상한액 200만원)

그림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현행

- 사용기간: 5일(유급 3일 + 무급 2일)
- 정부지원: X
- 청구시기: 출산일 날부터 30일 이내
- 분할사용: 원칙적 불가(노·사할의 시 가능)

개선

- 사용기간: 유급 10일
- 정부지원: 중소기업 5일 분 정부지원
- 청구시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분할사용: 1회 분할사용 허용

3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betterfuture.go.kr/pc/dire/dire1.php> BSH. 저출산정책과 육아정책 2018. 11. / 54

IV. 새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과 저출산정책 재구조화⁴⁰⁾

현부모 지원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

-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아동양육비 현실화
- 지원대상 자녀연령 상향(14→18세)
- 지원금액 인상(13→17만원/청소년 18→25만원)

지원대상 자녀연령

현행 ~14세 개선 ~18세

지원금액

13만원
18만원(청소년)



➔

17만원
25만원(청소년)



비혼출산 양육 **동등하게 대우받는 여건 확립**

- 제도정비**
혼인여부 등에 따른 차별 및 불합리한 제도 발굴 개선
- 문화개선**
일상 속 차별사례 발굴, 개선 캠페인, 반편견 교육강화
- 특성지원**
비혼모 부 등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 양육 관련 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



4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betterfuture.go.kr/pc/dire/dire1.php> BSH. 저출산정책과 육아정책 2018. 11. / 55

IV. 새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과 저출산정책 재구조화⁴¹⁾

신혼부부 주거지원

-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 매입·전세임대 공급 확대 및 육아여건 개선
 - 신혼부부 특화형 건설임대주택 공급
 - 공공지원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도입
- 지리적내 집 마련 기회 확대**
 - 신혼희망타운 세부 공급계획 마련
 - 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 내집·전셋집 마련 자금 지원**
 - 구입자금대출 지원 강화
 - 전세자금 대출 지원강화
 - 신혼부부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지원 강화
-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 공공주택 입주자격 확대
 - 주택도시시기 구입 전세자금 금리 우대



청년 주거지원

-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 일자리연계형 세이털 등 다양한 형태
 - 매입·전세임대 입주자격 확대
 - 입주인 임대사업 청년 우선 공급
- 기숙사형 청년주택 확충**
 - 대학기숙사 5만명 일주
 - 기숙사형 청년주택 1만명 지원
- 희망상가 공급**
 - 임대주택 단지내 상가
 - 청년 소상공인 사회적기업에 저렴하게 임대
- 청년 주거금융 지원 7대 상품**
 - 청년우대형 청약대출 출시 및 가입대상 확대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
 -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지원 확대
 - 고금리 2금융권 전세대출의 기금전세대출 전환 확대
 - 중기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저리 융자 사업 출시
 - 청년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지원 강화





4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betterfuture.go.kr/pc/dire/dire1.php> BSH. 저출산정책과 육아정책 2018. 11. / 56

IV. 새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과 저출산정책 재구조화⁴²⁾

재정 **위라벨 집중지원을 위한 재원확충**

- 고용보험 기금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고지원 확대



행정지원 체계

조직·인력·신설·강화 및 지원체계 효율화

조직 인력

지방노동관서 내 일 생활균형 전담조직 및 인력확충, 중앙 지방정부 간 거버넌스 강화

정보 플랫폼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정부부터 고용 주거 교육과 관련된 정보통합 구축

4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betterfuture.go.kr/pc/dire/dire1.php>

V.

육아정책의 중요성과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



V. 육아정책의 중요성과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 저출산 측면

저출산 위기 측면에서의 향후 5년의 중요성⁴⁴⁾

- 저출산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인구 감소의 속도와 그것의 회복력
 - 우리나라의 최근 30년 동안(1985~2015년) 합계출산율 감소폭은 매우 심각
 - 1985년 2.23명 → 2005년 1.08명(격차 1.15명)
 - 인구 감소에 대해 사회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속도가 너무 빠름
 - 2030년, 선진국가의 2030년 합계출산율은 1.5명 이상 전망(우리나라만 그 이하)
 - 합계출산율 1.9명대 전망: 프랑스, 스웨덴 1985년과 비교하여 각각 0.11명, 0.29명 증가
 - 합계출산율 1.5명대 전망: 초저출산 국가였던 독일, 이탈리아, 각각 0.05명, 0.07명 증가
 - 합계출산율 1.5명대 이하 전망: 우리나라만 1.4명대
- 초저출산 국가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 필요
 - 초저출산 1.3기준은 단순히 '양'적 지표가 아닌 육아 어려운 사회라는 '질'적 지표

44) 백선희(2016)의 『저출산 극복의 마지막 기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다미레연구소)의 내용의 일부임. 일부 수정함. 백선희(2017). 『대한민국의 저출산 위기와 대책: 특단의 조치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국회의원회 특강 자료(2017.7.6.) 재인용

V. 육아정책의 중요성과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 저출산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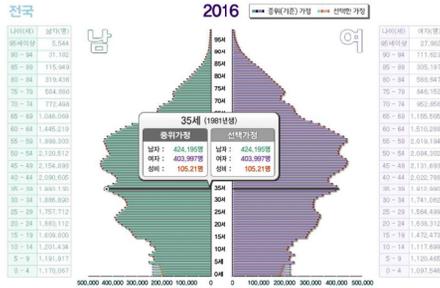
○ 장래인구 추계(2010~2060): 합계출산율 중위수준과 저위수준의 비교⁴⁵⁾



45) 백선희(2016)의 『저출산 극복의 마지막 기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다미레연구소)의 내용의 일부임. 일부 수정함. 백선희(2017) 재인용

V. 육아정책의 중요성과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 저출산 측면

- 출산율, 출생율 측면에서 본 현재(2010년대 후반)의 중요성: 30대 인구⁴⁶⁾
 - 2015년 여성의 초혼연령 30세, 첫째아 출생연령 31.2세, 즉 30대 출산 많음
 - 2016년 인구분포, 여성이 40만 명 이상이 되는 세 번의 파고. 마지막이 35세 전후



- 저출산정책의 효과는 약 한 세대가 지난 후에 나타나고, 그 파장이 지속
 - 2015년 25~34세의 인구가 절반으로 주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한 세대(2045년)

46) 백선희(2016)의 『저출산 극복의 마지막 기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더미래연구소)의 내용의 일부임. 일부 수정함. 백선희(2017) 재인용

V. 육아정책의 중요성과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 저출산 측면

- 2020년 출생아 수는 중위수준에서 45.1만 명, 저위수준에서 33.5만 명(격차 11.6만 명, 2010년 대비 74.3%)
 - 2060년 출생아수는 중위수준에서 28.5만 명, 저위수준에서 15.0만명(격차 13.5만 명)
 - 2010~2060년까지의 출생아수의 합은 중위수준에서 1,907만 명, 저위수준에서 1,348만 명(격차 559만 명)

<표> 장래인구 추계: 출생아 수

기본 가정	(단위: 명)						2010~2060 합계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중위수준(A)	486,000	451,000	409,000	325,000	306,000	285,000	19,065,000
저위수준(B)	486,000	335,000	297,000	226,000	177,000	150,000	13,480,000
격차	0	116,000	112,000	99,000	129,000	135,000	5,585,000
B/A (%)	100.0	74.3	72.6	69.5	57.8	52.6	70.7

*비고: 1) 중위수준: 2010년 합계출산율 1.23명이 2045년 1.42명까지 상승 후 지속
 2) 저위수준: 2010년 합계출산율 1.23명이 2045년 1.01명까지 감소 후 지속
 3) 2010~2060합계: 2010년부터 2060년까지의 연도별 총합임.
 4)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참고로 재구성함(통계청, <http://kosis.kr>, 다운로드 2016. 8. 11).



V. 육아정책의 중요성과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 삶의질 측면

- 육아의 주체로서의 여성, 부모의 삶의 질과 더불어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한 강조 필요
 - 인구 정책(합계출산율), 성인 중심의 기존 저출산 대책 방식은 한계에 직면
 - * 백선희(2012), “아이를 키우는 삶이 행복한 나라”⁴⁷⁾
 - 국가-사회-가족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책임지는 패러다임으로 전환 (성평등 관점, 사회구성원 모두의 공동 책임 의식과 실천의 필요)
 - * All Children are Our Children ->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 저출산, 육아정책을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저출산 대책은, '골든 트라이앵글' 전략과 연계 필요
 - 즉, 경제-고용-복지의 동반 성장 전략이기도 함
 - 돌봄-교육-고용-복지-문화-젠더 등을 통합하는 포괄적 정책 필요

47) 백선희(2012). “아이를 키우는 삶이 행복한 나라”. 문재인-한승원-박원순-조국 위. 『그 남자. 문지인』, 리얼텍스트

V. 육아정책의 중요성과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 삶의질 측면

- 저출산/육아정책 대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
 - 기존의 접근방법 중 실패 요인을 분석, 저출산 대책의 방향, 목표 등 재 설계
 - 인구학적 접근, 정부중심 접근, 중앙(<지방)정부 중심 접근의 한계
- 어떻게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인가?⁴⁸⁾
 - '출산 강조'에서 '육아 행복' 강조 (저출산 관리는 정부 몫, 육아행복은 국민 몫)
 - 성평등 사회, 가족을 지원하는 사회구조에서 출산율 제고 효과 기대
 - 아동의 행복 강조: 아동은 저출산 대책의 수단 아님(아동행복 지수 매우 낮음)
 - 아동행복을 위해서는 아동방임과 학대예방 등 소극적 조치로는 안됨
 - 아동행복 위해 교육개혁(공교육 강화, 사교육 약화) 필요. 아동 놀이권 등 강조
 - 중앙정부(범 부처)-지방정부-가족-사회(기업, 시민사회, 국민 등)가 공동 책임지는 구조
 - 사회제도적 접근뿐만이 아닌 사회문화적 접근 필요
 - 중앙정부 중심, 제도 중심의 저출산 대책의 한계 극복 필요

48) 백선희(2017). “대한민국의 저출산 위기와 대책: 특단의 조치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국회헌정회 특강 자료(2017.7.6.)

V. 육아정책의 중요성과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 삶의질 측면

- 육아정책의 영역의 측면
 - 2005년: 제1차 육아지원정책방안 ‘출생부터 초등학생까지’, 통합적 접근 필요
 - 기존: 보육정책 유아교육정책 중심의 육아정책
 - 최근: 임신, 출산, 초등돌봄 정책 확대 중. 그러나 초기
 - 육아정책, 범주, 양, 질이 충분한가?
육아의 위기(수요)와 육아정책(공급)의 격차
 - 열린 질문
육아의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육아관련 정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육아정책의 패러다임은 어떠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는가?
- 아이행복, 육아행복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통합적 사회정책 필요

BSh. 저출산정책과 육아정책 2018. 11. / 66

감사합니다.

|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토론회 |

육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과제



발표 1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포럼 운영
현황 소개

이정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초저출산 사회,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과제]

-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포럼 소개 -

2018. 11.28.

연구책임자 : 이정원 연구위원



목 차

1. 연구 과제 소개

2.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포럼 TF 구성

3.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포럼 운영 결과

1 | 연구과제 소개

- 대내외적 환경 변화, 가치관의 변화 반영 필요, 육아의 공공성 강화 요구 반영
- 육아정책 범위 확장과 재정립을 위한 융합 연구의 필요성
- 논의와 토론의 장 필요 사업성 과제로 추진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개발적립금 과제로 선정('18. 5.1~12.15)
- '초저출산 사회,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과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 | TF 운영

- TF명: 초저출산 사회,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포럼 TF
- 구성: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원내, 원외)
포함 총 15인(원내 7인, 원외 8인), 간사 1인
- 유아교육과 보육 외 다양한 관련 분야 전문가 참여

위원장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
부위원장	정재훈 교수(서울여대) 이정원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위원	김미곤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영옥 선임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실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손인숙 교수(건국대학교 병원) 양옥승 명예교수(덕성여자대학교) 최 영 교수(중앙대학교) 천현숙 선임연구위원(한국국토연구원)
간사	김나영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외 4인
	김문정 전문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 | TF 운영



TF 운영 방향: 육아정책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육아정책 패러다임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도출함

운영 방식: 외부 위원 1인당 1편 주제 발표 및 위원간 토론을 위한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포럼’ 운영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3 | TF 운영 결과



➤ **운영 결과:** 포럼 총 4회 개최, 외부위원 8개 주제 발표 포함 총 10개 발표

	주제	발표자
1차 (7.10)	1. 초저출산 사회, 육아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백선희
	2.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복지	김미곤
	3. 아동권리' 복지 관점에서의 육아정책	최영
2차 (8.29)	4. 가족(젠더) 관점에서의 육아정책 - 가족형태 다양성 관점에서의 육아정책	정계훈
	5.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육아정책 - 보육교사 일사리의 위기와 대응	김영옥
	6. 영유아 발달' 교육적 관점에서의 육아정책	양옥승
3차 (10.2)	7. 모자보건 관점에서의 육아정책	손인숙
	8. 공간(지역)적 관점에서의 육아정책 - 지역사회자원의 보육지원정책 개선 방향	
4차 (10.26)	9. 여성학/ 문화적 관점에서 보는 한국의 저출산과 돌봄사회의 전환	김은실
	10. 육아정책의 전개 과정과 국가계획	이정원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To be
continued...

|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토론회 |

육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과제



발표 2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포럼 운영 결과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포럼 TF 부위원장)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포럼 운영 결과

발표: 정재훈 포용적 복지국가 육아정책포럼 TF 부위원장,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차 례

- I. 포용적 성장·포용적 복지와 육아정책
- II. 영유아 발달·교육적 관점에서의 육아정책
- III. 아동권리·복지 관점에서의 육아정책
- IV. 모자 보건 관점에서의 육아정책
- V.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육아정책
- VI. 공간(지역)적 관점에서의 육아정책
- VII. 문화적 관점에서의 육아정책
- VIII. 가족(젠더) 관점에서의 육아정책





I . 포용적 성장·포용적 복지와 육아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선임연구위원

1. 복지국가와 거대한 후퇴

- 복지국가는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지향하는 인류의 이상을 담은 국가 운영 시스템
->『거대한 후퇴(Die große Regression)』 상태에 직면

2. 거대한 후퇴와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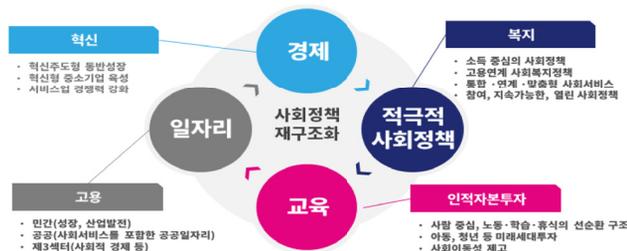
- 복지국가 위기를 기회 삼아 1970년 말 신자유주의 등장-> 낮은 세율로 성장 도모
-> 불평등 심화, 경제성장을 악화, 재정적자 심화
-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둔 정책, ‘압축 성장’에 의한 ‘압착 위기’ 발생
-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청년들의 희망 빈곤(3포, 5포, N포, 헬조선),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자살률 ->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I . 포용적 성장·포용적 복지와 육아정책

3.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복지

- 급격한 기술 발전에 대응 ‘교육-일자리-성장-복지’ 간 선순환체계
‘황금 사각형 모델(Golden Quadrangle Model)’ 구축 필요



[그림 1] 황금사각형 모델

- 거대한 후퇴에 대응하는 패러다임 전환으로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과 ‘포용적 복지(Inclusive Welfare)’ 조명



I. 포용적 성장·포용적 복지와 육아정책

4. 포용적 성장의 정책 내용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금융 접근성 강화
- 창업기회의 확대,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 조성, 불우한 환경에 처한 이들의 교육수준 향상, 저발전 지역의 개발, 조세제도의 누진성 강화, 근로유인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사회안전망 확대

-> 목표는 소득재분배 자체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

5. 포용적 복지

- 철학적 함의: 인본주의, 보편주의, 사회통합, 상생, 다양성에 대한 존중, 분배정의 실현
- 포용적 성장(소득주도 성장)의 논리 구조는 포용적 복지에서 '성장'과 '복지' 간의 선순환 흐름으로 주장
- 포용적 복지국가: "어느 계층도 소외됨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를 고루 누리면서, 개인이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나라"



II. 영유아발달·교육적 관점에서의 육아정책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양옥승 교수

1. 육아(특히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 유치원, 어린이집의 취원율 제고, 교사,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만으로 불충분 -> 유아발달과 사회변화에 맞춘 '최적화된 교육과정 시행' 시 비로소 확보됨

2. 초저출산 사회의 포용적 육아정책

- '영유아 교육과정의 방향' 탐색 필요 -> '영유아 능력개발 중심 교육과정' 및 기본 전제 6가지, 핵심능력 5가지 제시



II. 영유아발달·교육적 관점에서의 육아정책

3. 영유아 능력개발 중심 교육과정의 기본 전제 6가지

- ✓ 대상: 초등학교 취학 전 ‘모든’ 영유아
- ✓ 목표: 영유아의 ‘일상 생활과 삶의 질 향상’
- ✓ 교육과 보육이 ‘융합’ 된 텍스트
- ✓ 영유아의 ‘미래’만이 아닌 ‘현재’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 주목
- ✓ ‘가족지원 프로그램’과 병행한 포괄적 설계 및 실시
- ✓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전문성’과 ‘자율성’ 담보



II. 영유아발달·교육적 관점에서의 육아정책

4. 영유아 능력개발 중심 교육과정의 핵심능력 5가지

- ✓ 건강·안전관리
- ✓ 자기조절
- ✓ 의사소통
- ✓ 창의적 사고와 표현
- ✓ 공감 및 배려



Ⅲ. 아동권리·복지 관점에서의 육아정책

-돌봄정책으로서의 현금수당: 아동수당도입에 있어 몇가지 논점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최영 교수

1. 아동수당의 정책효과

- 아동의 **생존권 보장**을 통한 아동복지/권리 실현
- 보편적 수당을 통한 **사회통합**
- 수평적 **소득재분배**(무자녀가구->유자녀가구)
- 미래**노동력 확보**(고령화 사회 대응)
- 여성의 무급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통한 **여성지위향상**
- **저출산** 문제 대응

2. 아동가족정책으로서 '아동수당'의 특성

- '아동돌봄 노동 지원' 제도 아닌 아동양육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지원 제도임



Ⅲ. 아동권리·복지 관점에서의 육아정책

-돌봄정책으로서의 현금수당: 아동수당도입에 있어 몇가지 논점

3. 아동수당 도입 관련 쟁점

- ✓ **정책 대상의 범위**: 제도 취지 및 효과 고려 시 18세 이하 모든 아동 대상 도입이 적절, 대상 제한 시 소득 기준 보다는 **연령** 기준이 적절
- ✓ **급여형태**: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비지출 지원한다는 점에서 **현금** 급여 형태 타당, 단 추가적 정책 목적(예: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해 '바우처' 형태 고려 필요
- ✓ **급여수준**: 아동 **1인당 10~20만원** 내외 금액 보장 설계 적절(국제노동기구 사회보장협약, OECD 국가 급여수준 등 고려), 저출산 대응 고려시 아동수에 따른 차등급여 도입 제안
- ✓ **재원조달방식**: 보편적 급여 제도 도입 시 **조세**를 통한 조달 적절



Ⅲ. 아동권리·복지 관점에서의 육아정책

-돌봄정책으로서의 현금수당: 아동수당도입에 있어 몇가지 논점

4. 아동수당과 관련 아동가족 정책의 연계조정 필요성

- ✓ **양육수당**: 부모의 아동 돌봄노동 지원 제도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저해 가능성 있음. 아동수당도입에 따라 장기적으로 축소 필요
- ✓ **유급휴가**: 부모의 노동권과 부모권 보장 제도로 아동수당제도와 차별화 됨.
- ✓ **아동관련 세제지원**(예: 아동장려금, 자녀세액공제): 아동수당과 성격 유사, 사각지대, 소득역진성 등 문제로 아동수당도입에 따라 축소 또는 폐지 필요

-> 아동권리에 기반한 '보편수당', 아동의 특수육구에 기반한 '육구별 수당'을 조합 -> **'한국형 아동수당제도'** 설계 필요



Ⅳ. 모자보건 관점에서의 육아정책

-건강한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정책제언
건국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손인숙 교수

1. 임신전 건강관리 체계구축

➤ 임신전 건강관리의 필요성

- **태아프로그래밍 이론**: 성인병에 대한 개인별 민감도, 자궁내에서 결정
- 대부분의 임신결과 결정 요인: 임신전과 임신초기에 이루어짐.
- 신경관 결손증, 입술 갈림증, 심장기형 등 선천성 기형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전 3개월부터 임신 초기 3개월까지 엽산을 복용해야 함.
- 저출산과 함께 출산건강의 악화로 인하여 **고위험 임신 증가**: 임신전 임신관련 위험요인을 평가, 개선 후 계획임신 필요



IV. 모자보건 관점에서의 육아정책

-건강한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정책제언

➤ 임신전 건강관리 체계 구축

- 가임 남녀에 대한 건강검진 시행 : 25세 전후 가임기 남녀 생애 주기별 건강 검진
- 임신, 출산과 관련 의학정보 제공 및 계획임신 홍보
- 혼인신고 부부에 대한 계획 임신 교육 및 상담 : 임신 전 검진, 건강한 생활습관 교육, 예방접종, 엽산제공, 난임지원 안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IV. 모자보건 관점에서의 육아정책

-건강한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정책제언

2. 분만관련 인적자원 확보 계획 수립

➤ 산과 진료분야 전문인력의 심각한 감소

- 산부인과 신규전문의 감소 : 2001년 (270명)에서 2016년 96명으로 64% 감소

➤ 종합 병원의 분만관련 인프라 투자 감소

- 분만 관련 저수가 정책으로 인력, 시설 등 병원 투자 감소

➤ 기존 산부인과 전문의의 분만 기피

- 분만 의료기관수 지속적인 감소로 분만취약지 증가
- 모성사망비 지역별 격차 증가

➤ 분만관련 인적 자원 확보에 대한 대책

- 산부인과 지원 기피 요인 제거 등 산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 수립
- 분만관련 의료분쟁 대책: 무과실의료분쟁에 대해 100% 국가 배상책임
- 분만관련 국민건강보험 수가 개선(분만료 현실화)



IV. 모자보건 관점에서의 육아정책

-건강한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정책제언

3. 임신부 등록을 통한 산모관리체계구축

▶ 임신부 등록을 통한 산모관리체계구축 현황

-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임신 등록 정보 빈약
- 출생증명서 양식이 간단, 의료 관련 통계 부적합
- 출생신고 신고누락 가능성 있음(보편적 등록제 아닌 보호자 신고우선주의)
- 임신 등록체계와 출산 등록 체계의 이원화: 분절적인 정보 수집, 보건정책에 이용하지 못함

▶ 임신부 등록제 구현

- 임신 및 출산관련 정보 관리하는 기관으로 '임신·출생정보센터(가칭)' 설치
- 국민행복 카드 발급을 위한 임신출산 확인서에 보건관련 건강정보 등록
- 출생증명서에 보건관련 건강정보 등록
-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정보등록 주체 : 병원 의료진, 산모



IV. 모자보건 관점에서의 육아정책

-건강한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정책제언

3. 임신부 등록을 통한 산모관리체계구축

▶ 임신·출생정보센터(가칭)의 역할

- 임신부에 대한 근거자료 생성, 지역별, 기간별, 중증도별 예정 수요를 분석하여 출산 예상지도 작성
- 임신과 출산에 대한 근거기반 정책 수립과 평가를 포괄적, 체계적 수행
-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정보 기반 보건소 역할 강화 : 임신부 물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영유아 예방접종

▶ 임신 출생 등록 시스템의 장점

- 보편적 출생등록주의로 아동 인권 보장 강화
- 행정절차 간편화
- 정확한 보건통계 작성(주산기 사망률, 영아 사망률)
-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의 체계화
- 임신과 출산과 관련하여 산모와 아이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를 통하여 모자 보건증진에 기여



V.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육아정책

-보육교사 일자리의 문제점과 육아친화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일가정 양립 정책의 우선순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옥 선임연구원

- ❖ 보육시장 형성의 주요 축인 ‘보육교사’ 일자리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파악함

1. 보육서비스와 보육시장의 특성

- 보육서비스: 가격(비용), 편의성, 접근성, 신뢰성, 품질 등 차원에서 세분
- 보육시장: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 낮은 진입비용

2. 보육교사 일자리의 위기 국면

- 1) 개방형 양성과 느슨한 자격체계
 - 2) 보육교사 자격증의 장롱면허증화
 - 3) 급여 문제: 학력 무관하게 1호봉으로 시작, 인적자원투자의 임금 미반영
- 보육교사 임금결정요인: 기관설립유형, 경력(+), 학력 및 자격증은 유의한 효과 없음



V.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육아정책

-보육교사 일자리의 문제점과 육아친화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일가정 양립 정책의 우선순위-

2. 보육교사 일자리의 위기 국면

- 4) 근로기준법 위배되는 장시간 근로:
운영시간과의 차이, 휴게/점심시간 확보 어려움-> 원아들과의 양질의 상호작용 불가능
- 5) 초과근로 및 휴가제도: 시설간 격차 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준수 문제.
-> 근로환경에 대한 맞춤형 모니터링 필요
- 6) 이직과 전직: 대표적 보육의 질 저해 요인-> 근로조건 개선으로 보육교사의 첫 직장 이직률 개선 필요
- 7) 민간 주도의 보육서비스 공급: 최근 감소 추이
- 8) 보육교사의 조직화: 원장과 교사의 비대칭적 조직화->보육교사 인권 보호, 권익 대변할 조직 필요
- 9) ‘보육교사’ 통계 확보 필요



VI. 공간(지역)적 관점에서의 육아정책

-보육시설 공간배분에 대한 합리적 기준 필요-
한국국토연구원 천현숙 선임연구위원

1. 육아정책에서의 공간적 관점의 중요성

- 한국의 육아정책은 저출산정책 일환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짐. 그러나, 보육시설의 분포, 접근성, 시설의 질적 수준 등에 대한 평가 등 미흡한 점이 있음
 - 영유아시설의 도-농 격차
 - 보육시설 설치기준의 신규아파트단지에만 적용: 주거지역에 따른 형평성 저해
 - 생활SOC 강조에도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보육서비스 격차 확대
 - 어린이집 포함 보육지원시설은 생활밀착 인프라의 하나로 생활권내 입지해야 함.
- 생활권 단위에서의 보육시설 분포 현황을 파악, 계획수립에 반영



VI. 공간(지역)적 관점에서의 육아정책

-보육시설 공간배분에 대한 합리적 기준 필요-

2. 보육시설 공간계획에 지자체 역할 제고

- 보육시설은 생활밀착형 SOC의 하나, 시설 현황 파악 및 계획 수립에 지자체 역할 중요
- 보육시설 관련 계획은 시도는 물론 시군단위의 생활권 중심 수립 필요
- 이용권역 분석에 기초한 지역별 보육시설 입지 실태와 평가 필요
- PDCA (Plan, Do, Check, Action)의 운영
- 지자체별로 5년 단위의 보육시설 공급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계획의 평가와 피드백, 재조정이 연단위로 이루어져야 함
- 보육시설 확충 지표, 출산율 지표 등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일본 요코하마시: PDCA 사이클을 확보, 중간단계별 보육관련 지표의 목표 및 전망 등을 재검토하고 있음



Ⅶ. 문화적 관점에서의 육아정책

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은실 교수

1. 저출산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시각

➤ 출산: 여성문제 VS 국가/ 사회의 문제?

- 한국사회에서의 저출산에 대한 진단: 고립된 핵가족 내에서의 과도한 육아부담,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남성의 저조한 가사/ 육아 참여 ->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음-> 결혼한 여성의 삶의 조건 지원이 저출산 해결의 정책방향이라는 인식
- 2005년 이후 저출산 대책(출산장려 정책): 이러한 저출산 진단 및 인식에 의거, '일-가정 양립 지원', '아버지 양육 참여 지원' 등 시행

➤ 역사적으로, 출산은 여성 자신이 아닌 사회적, 문화적으로 규정됨.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임신하고 출산할 것인지, 몇 명의 아이를 낳을 것인지...)

ex. 가족계획사업



Ⅶ. 문화적 관점에서의 육아정책

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은실 교수

2. 돌봄 사회로의 전환과 육아정책: 드라마 <마더>를 통해

➤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삶을 기획하기 시작

-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 -> 고학력의,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은 '일 잘하는 직장여성'임과 동시에 '좋은 엄마', '좋은 아내', '행복한 개인'이 될 수 없다고 인식함
- 행복한 엄마와 행복한 아이들 아닌, '사회의 기준에 맞는 엄마와 아이'를 원하는 사회는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동기 부여를 약화시킴

-> '과부화된 모성의 삶' 선택을 거부

- "전 사회의 성원이 모두 다 돌봄을 수행하는 사회로의 전환" 이 여성이 전담하는 육아, 돌봄, 재생산노동으로부터 여성이 해방되는 길임(페미니스트 철학자 에바 페더커티)



Ⅶ. 문화적 관점에서의 육아정책

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은실 교수

2. 돌봄 사회로의 전환과 육아정책: 드라마 <마더>를 통해

- **돌봄의 공공윤리(공적 규범)화:** 모두가 돌봄을 줄 수 있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첫 번째 단계: '돌봄 대상자'와 '돌봄 제공자'의 '돌봄 관계' 형성
 - 두 번째 단계: '돌봄 관계 밖의 제 3자'가 돌봄 제공자를 돌보아야 하는 '2차 돌봄 관계' 형성
- **드라마 <마더>:** 한 여성이 어머니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줌.
 - 아이를 낳은 어머니를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의 부재 속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여성도 있으나 아이를 낳지 않았지만 아이를 공감하고 돌볼 수 있는 여성, 물질적인 자원을 줄 수 있는 여성 등 다양한 모성의 가능성도 존재



Ⅶ. 문화적 관점에서의 육아정책

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은실 교수

2. 돌봄 사회로의 전환과 육아정책: 드라마 <마더>를 통해

- **정책 방향:** 가정에서의 돌봄 노동권 보장, 자신의 돌봄 노동을 대체하고 휴가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의 마련, **다양한 모성이 함께 하는 마을을 만드는 정책**
 - 아이를 낳는 모성들의 다양성 인정, 아이를 낳지 않아도 모성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모성이 함께 하는 마을을 만드는 사회정책 지향
 - 효율과 보상이 아닌 '행복' 이 삶의 기준이 되는 사회, 다양한 모성이 존재하는 마을에서 아이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모성이 있다면?



Ⅷ. 가족(젠더) 관점에서의 육아정책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

포용적 복지국가의 육아정책 - 독일의 변화를 중심으로



'상대적 고출산' 국가와 초저출산 국가 간 비교

	상대적 고출산 국가	초저출산 경험 국가
성평등	높은 수준(*영미권은 기회의 평등)	강한 성별역할분리 규범 존재
가족 형태 다양성	정상규범으로서 법률혼 가족 감소	정상규범으로서 법률혼 가족
다문화성	높은 수준(*노르딕 국가의 통제된 개방)	높은 수준
일·가정 양립	남녀의 공통 과제로서 제도화·규범화	여성적 과제 → 고학력 여성 중심 출산 기피 전략
사회적 돌봄 지원	서비스와 현금급여의 조화 (*영미권은 저비용 민간 영리 중심)	독일어권 → 현금급여 중심 남유럽권 → 가족 책임 강조
보육 인프라	공보육 중심 (*영미권은 민간 영리 중심)	독일어권 → 민간 비영리 중심 (1~2세 아동 지원 서비스 부족) 남유럽권 → 가족 책임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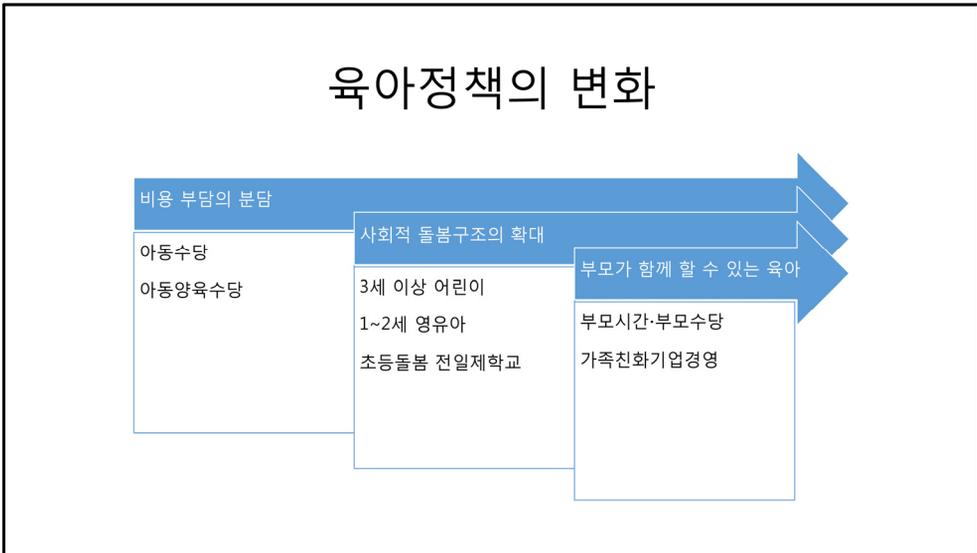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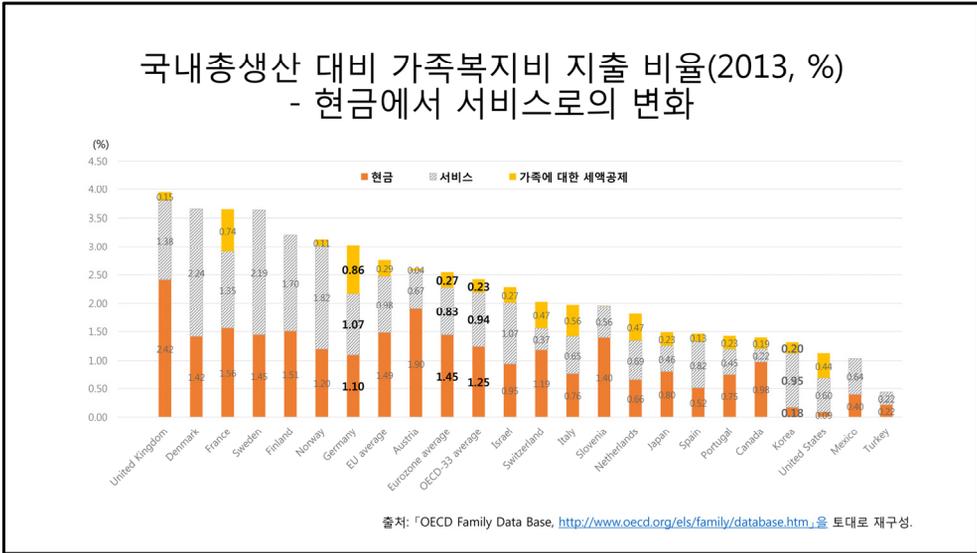
출처: 「대한민국정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6-2020), 28쪽」을 토대로 재구성.

'포용'의 차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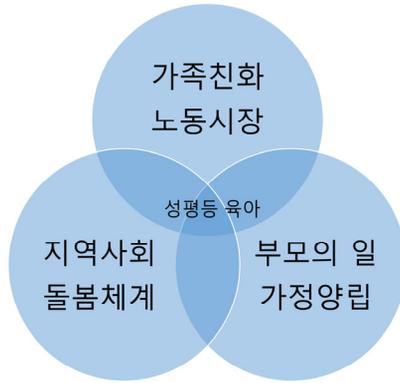


독일의 변화





육아정책의 자리매김



지역사회돌봄체계의 완성





|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토론회 |

육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과제



발표 3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과제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2018. 11. 28(수)

육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정책과제 -전문가 조사 결과-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분야			연령		
가족학	6	21.4	30대	1	3.6
아동학	2	7.1	40대	5	17.9
유아교육학	5	17.9	50대	15	53.6
보건의료	4	14.3	60대	7	25.0
경제	2	14.3	해당분야 경력		
사회학/사회복지학	5	17.9	평균 (표준편차)	24.7 년(16.69년)	
여성학	2	7.1			
기타	2	7.1			
계				28	100.0

육아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기여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				보통	↔				매우 높음	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00	36	36	143	36	143	393	143	71	00	1000(28)	632(1.76)	
아동발달 지원	36	71	00	36	143	250	321	143	00	00	1000(28)	593(1.82)	
부모역할 지원	36	71	107	71	214	286	143	00	71	00	1000(28)	521(1.95)	
저출산 대응	107	71	36	143	214	250	143	36	00	00	1000(28)	479(1.97)	

주: 평균은 '매우낮음(1점)'~'매우 높음(10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육아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향후 강조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강조 불필요	↔				현 수준	↔				매우 강조	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00	00	00	00	00	71	71	179	179	500	1000(28)	896(1.29)	
아동발달 지원	00	00	00	00	143	00	107	143	214	393	1000(28)	846(1.75)	
부모역할 지원	00	00	00	00	36	107	107	214	286	250	1000(28)	836(1.45)	
저출산 대응	00	00	36	36	214	71	107	36	179	321	1000(28)	761(2.30)	

주: 평균은 '강조불필요(1점)'~'매우 강조(10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육아정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보통	동의하는 편임	전적으로 동의함	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여성 중심의 육아 역할 지원 → 양성 평등한 육아역할 지원 (남성을 위한 육아지원 확대)	0.0	36	36	14.3	78.6	100.0(28)	4.68(72)
육아기 부모, 성인 중심 → 아동의 행복을 위한 (아동중심) 육아정책 강조	0.0	0.0	7.1	25.0	69.9	100.0(28)	4.61(63)
'출산 대책'으로서의 육아정책 → '육아' 자체의 행복을 위한 육아정책	0.0	0.0	10.7	35.7	53.6	100.0(28)	4.43(69)
정부와 가족 중심의 육아정책 → 정부와 가족, 사회(시민사회, 기업, 국민)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의 육아정책 (사회의 역할 확대)	0.0	0.0	7.1	46.4	46.4	100.0(28)	4.39(63)

주: 평균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전적으로 동의함(5점)'으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육아정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보통	동의하는 편임	전적으로 동의함	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보육·유아교육 정책 중심 → 일과 생활의 균형 정책 강화	0.0	36	10.7	32.1	53.6	100.0(28)	4.36(83)
보육·교육 중심의 육아정책 → 학문간 융합과 통합을 통한 육아정책 영역 확대 (보육·교육 + 복지+ 보건 + 경제 + 문화 + 여성 + 국토+ 과학 + 환경 등)	0.0	7.1	7.1	39.3	46.4	100.0(28)	4.25(89)
영유아 중심 육아정책 → 육아정책의 대상 태아기 (임신)부터 아동기까지 확대	0.0	36	17.9	32.1	46.4	100.0(28)	4.21(88)
저소득 계층 위주의 정책 → 중산층, 전 계층 포괄 정책 강조	36	7.1	14.3	25.0	50.0	100.0(28)	4.11(113)
사회제도 중심의 접근 → 사회문화적 접근 강조	36	10.7	7.1	32.1	46.4	100.0(28)	4.07(115)

주: 평균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전적으로 동의함(5점)'으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육아정책의 범위 확대 시 연계·융합 필요 정도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는 편임	보통	필요한 편임	매우 필요함	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일-가정 양립 정책 분야	0.0	0.0	0.0	35.7	64.3	100.0(28)	4.64(.88)
가족(복지) 정책 분야	0.0	0.0	3.6	35.7	60.7	100.0(28)	4.57(.57)
아동의 권리·복지 정책 분야	0.0	0.0	10.7	25.0	64.3	100.0(28)	4.54(.69)
고용·노동정책 분야	0.0	0.0	10.7	28.6	60.7	100.0(28)	4.50(.69)
사회복지·문화 관련 정책 분야	0.0	7.1	17.9	32.1	42.9	100.0(28)	4.11(.96)
여성 정책 분야	0.0	3.6	25.0	32.1	39.3	100.0(28)	4.07(.90)
보건·의료 정책 분야	0.0	7.1	21.4	42.9	28.6	100.0(28)	3.93(.90)
주거 및 지역 개발 정책 분야 (신혼부부 주택단지, 혁신도시, 도시재생사업 등)	0.0	21.4	17.9	42.9	17.9	100.0(28)	3.57(1.03)
청년 결혼지원 정책 분야	10.7	7.1	35.7	25.0	21.4	100.0(28)	3.40(1.23)
환경 정책 분야(예: 미세먼지 대응 등)	7.1	17.9	39.3	25.0	10.7	100.0(28)	3.14(1.08)

주: 평균은 '전혀 필요하지 않음(1점)'~'매우 필요(5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육아정책연구 범위 확대 시 포괄 연령범위의 적절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태아	7.1	17.9	7.1	28.6	39.3	100.0(28)	3.75(1.35)
영유아	※ 현재 육아정책연구의 주된 대상						
초등 저학년	7.1	0.0	3.6	39.3	50.0	100.0(28)	4.25(1.08)
초등 고학년	7.4	14.8	18.5	29.6	29.6	100.0(27)	3.59(1.28)
청소년(중등)	10.7	28.6	28.6	25.0	3.6	100.0(27)	2.81(1.08)
청소년(고등)	21.4	25.0	32.1	17.9	3.6	100.0(27)	2.48(1.05)

주: 평균은 '매우 부적절(1점)'~'매우 적절(5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연령 범위별 필요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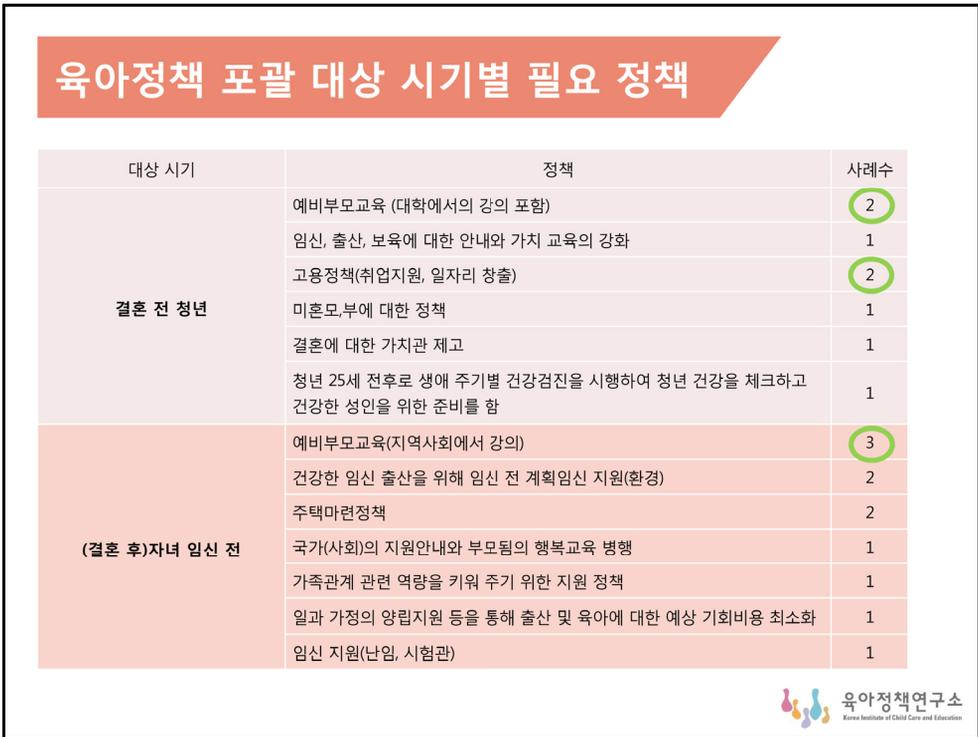
연령 범위	정책	사례수
태아	모 및 태아 보호를 위한 출산 전 휴가, 검진 프로그램 지원 및 홍보	4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의료정책 및 경제적 정신적 부모 지원 정책	1
	보건·의료지원	1
	모의 사회적 신분(미혼모, 장애인, 비정규직 등)과 상관없이 모든 태아의 안전(환경, 재난 등)한 출생에 대한 국가 보장	3
	임산부 고용지원	1
	산전·후관리	1
	임산부 및 배우자 교육	2
	태아의 권리 인정 정책	1
초등 저학년	방과 후 돌봄 정책(공동육아)	5
	방과 후 교실	1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	1
	지역사회 교육문화 공동체 문화 구축 및 실현	1
	사교육 근절 대책	1
	아동의 권리·복지 정책, 아동 발달 지원 정책	1
	여성의 일·가정 양립지원, 육아를 위한 근로제도 활성화	1
	취학 후 사각지대 해소 정책 등 (교육시수 등 교육정책 개편)	1



연령 범위별 필요 정책

연령 범위	정책	사례수
초등 고학년	놀이, 사교육 제한	2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협력 체계 구축	1
	문화 활동 및 멘토링	1
	아동의 권리·복지 정책, 아동 발달지원 정책	1
	청소년 직전까지 국가가 돌봄 지원. 성장이 빠른 초등고학년의 청소년기로의 건강한 이행을 위한 돌봄 필요	1
	한부모, 다문화, 장애부모, 저소득 가구 등의 초등고학년 정책 필요	1
청소년(중등)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협력 체계 구축	1
	심리정서적 지원, 사교육 제한	1
	진로 교육 및 취미 생활 지원	1
청소년(고등)	초기 성인기로의 전환 지원 정책	1





육아정책 포괄 대상 시기별 필요한 정책

대상 시기	정책	사례수
자녀 임신 후~출산 전	부모교육 및 지원(의료기관에서의 강의)	5
	보건·의료지원(정기 검진)	3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육아휴직, 경력단절의 불이익근절)	2
	돌봄 자원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1
	태아를 중심으로 한 부부생활 지원 정책	1
	모든 태아의 건강한 출생을 위한 환경 필요	1
	임산부 고용 지원	1
	산전산후관리	1
	가정친화정책(양성평등)	1
	임신 및 출산 등록 사업 지원	1

초저출산 사회에서 긴급하게 요구되는 육아정책

정책	사례수
· 일과 가정의 양립, 육아를 위한 고용·근로 제도를 활성화하여 여성의 출산을 지원하고 육아에 대한 부담을 완화	6
· 청년 취업 및 일자리 정책, 근로시간 감축, 유연탄력근무제	6
· 결혼, 출산, 자녀양육 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는 실정. 결혼 이후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때 불안감이 사라지고 안정감이 높아지면 출산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5
· 안심 돌봄 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부모양육 및 부모자녀관계 교육 등	5
· 사회 전반적 시스템 및 사회문화(경쟁 시스템, 사교육 시스템, 주거 문제 해결, 사람 중심 사회문화 조성)	3
· 육아 비용에 대한 지원(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3
· 질 높은 국공립시설 확충	3
· 미혼모에 대한 지원 및 정책	2
· 시간이 걸리더라도 출산과 육아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 육아 관련 문화적 부분의 노력이 필요함.	2
· 각종 매체에서 육아나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부각하기보다는 행복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으면 외적인 지원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함(가정친화정책)	2
·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자 돌봄의 사회화, 장년층의 부모세대 부양의 책임을 국가가 담당하는 특단의 조치 필요. 빈곤의 대물림에서 가족 부양책임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것에 대한 정부 대책 필요	2
· 자녀출산은 장기적인 맥락에서 삶을 계획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육아정책 역시 장기 맥락에서 출산을 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1



초저출산 사회에서 긴급하게 요구되는 육아정책

정책	사례수
· 가족복지 측면의 접근	1
· 주거 및 사회는 모든 연령에서 중요한 사안이므로 생산가능인구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관계로 또 다른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 됨. 사회통합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1
·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무자녀 가족보다 유자녀 가족의 이점과 만족도가 더 많음을 현실적으로 경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예)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한 고용노동정책의 차별화, 세금 및 주택 정책 등	1
· 미혼 및 만혼화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청년층의 혼인을 제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1
· 지역별 산부인과 지원, 출산 중 사망하는 산모와 태아 수 파악, 산부인과 사각지대 해소	1
· 저출산 관련 법조항 준수·관리·감독 및 처벌 강화	1
· 0-2세 아동양육에 있어 부모의 부모권과 노동권, 그리고 아동권이 함께 충족될 수 있는 정책 수립. 이를 위해 1차적으로 유급휴가(출산, 양육)의 내실화가 필요함.	1
· 육아휴직제도 보편적 확대(영세자영업 및 비정규직까지)	1
· 영아기에 모자간 정서관계 증진 노력	1
· 인위적 산후조리(산후조리원 이용 등)에서 가족 내에서의 산후조리가 가능한 도우미 정책 강화-모자간의 정서적 관계 상승효과 기대	1
· 가족 내 육아(조부모의 역할 증대)의 장단점 연구로 장점을 늘리고, 단점을 보완	1
· 남성의 동등한 육아참여	1
· 육아정책으로 초저출산에 대응할 수 없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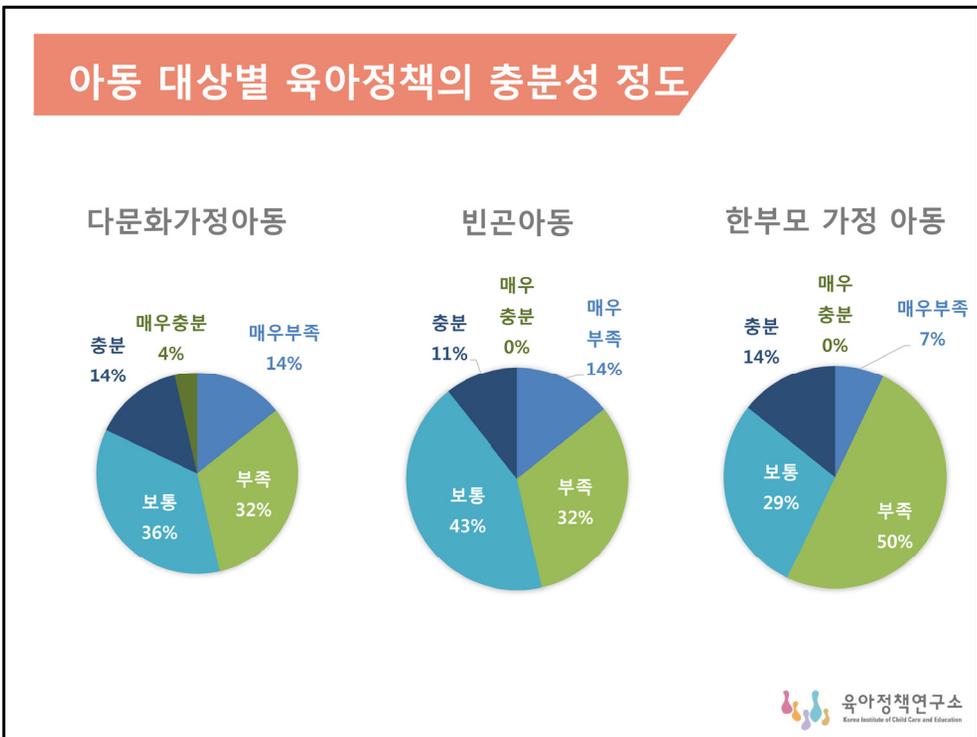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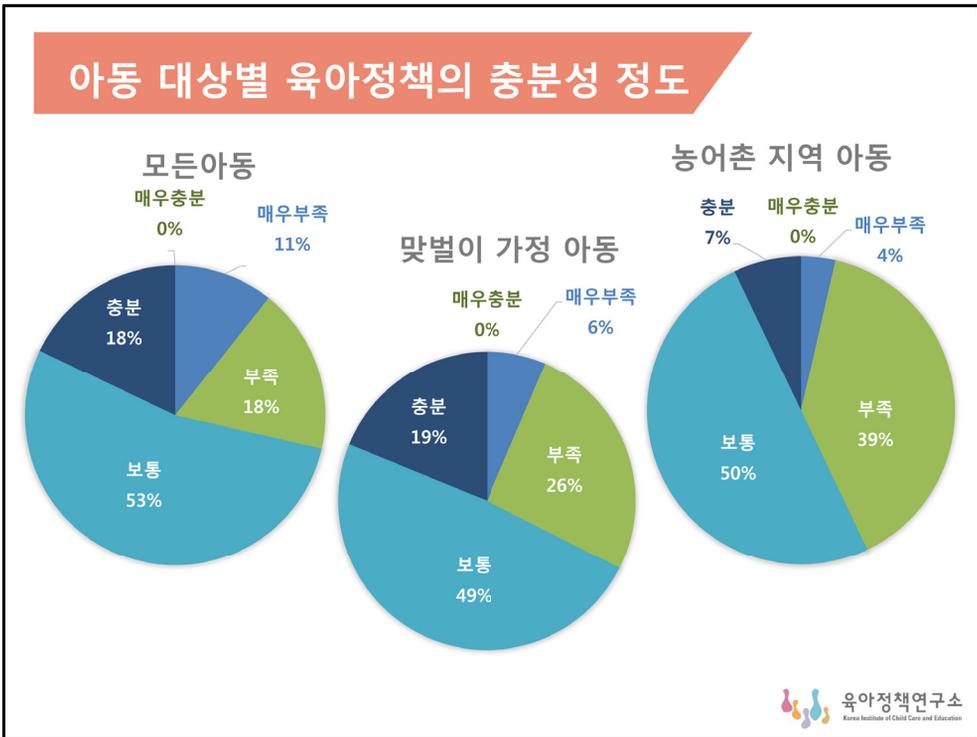
아동 대상별 육아정책의 충분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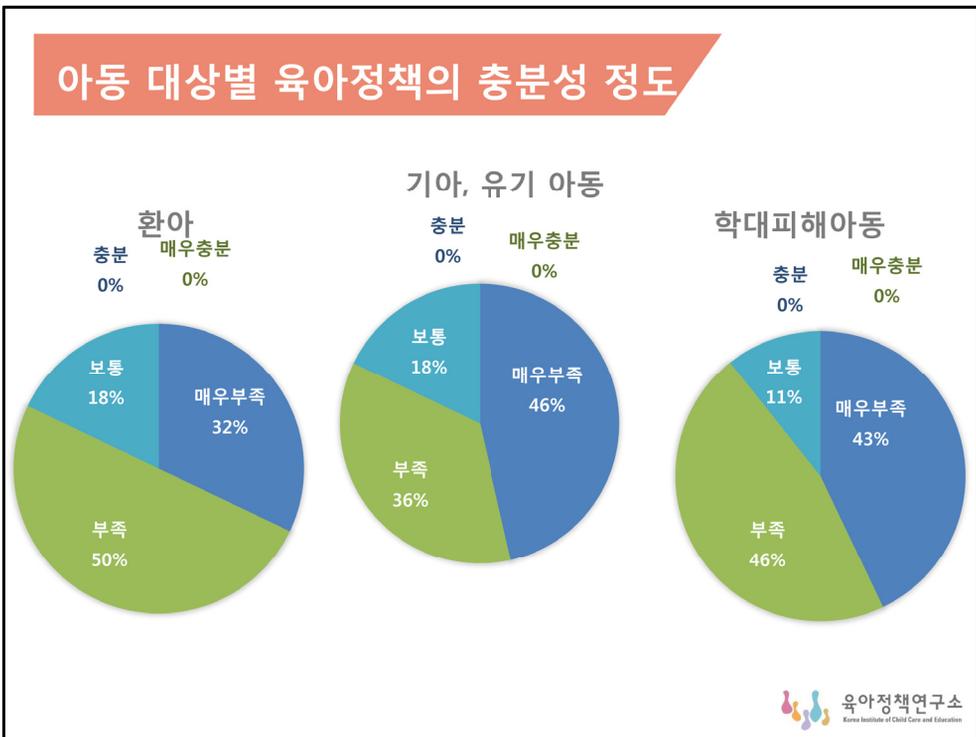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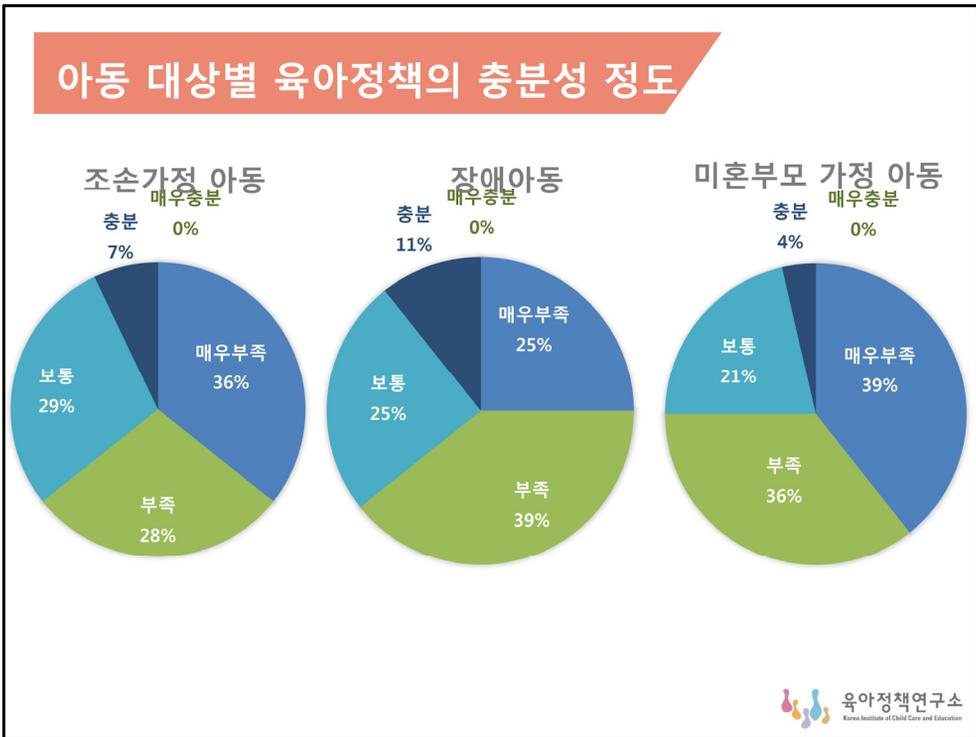
단위: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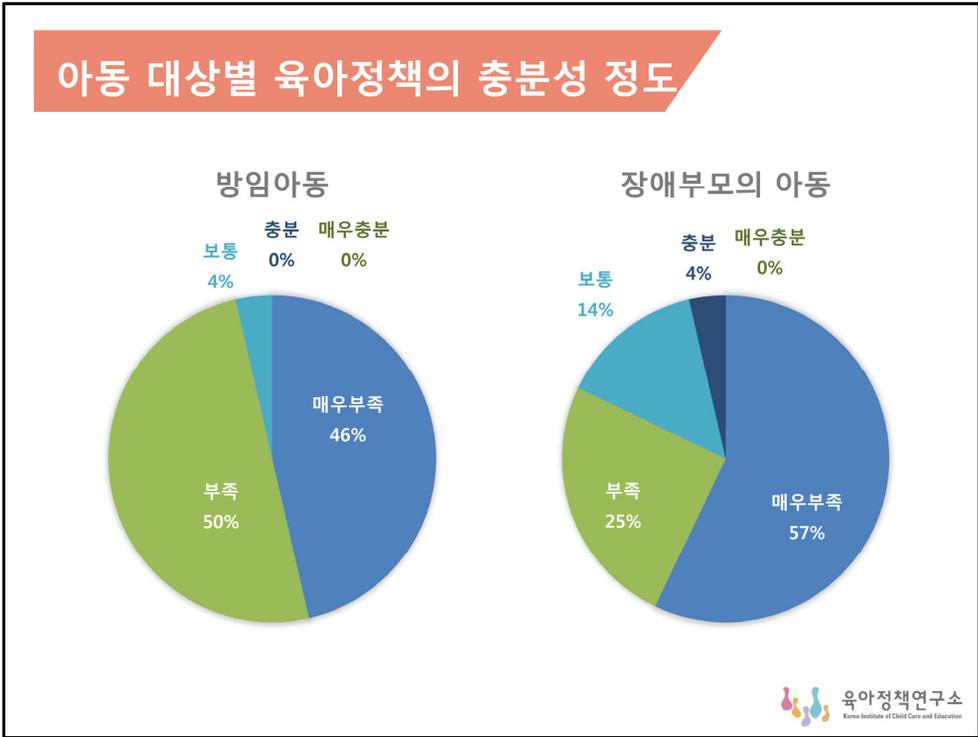
구분	매우 부족	부족	보통	충분	매우 충분	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모든 아동	10.7	17.9	53.6	17.9	0.0	100.0(28)	2.79(.88)
맞벌이 가정 아동	7.1	28.6	53.6	20.7	0.0	100.0(28)	2.68(.77)
다문화 가정 아동	14.3	32.1	35.7	14.3	3.6	100.0(28)	2.61(1.03)
농어촌 지역 아동	3.6	39.3	50.0	7.1	0.0	100.0(28)	2.61(.69)
빈곤아동	14.3	32.1	42.9	10.7	0.0	100.0(28)	2.50(.88)
한부모 가정 아동	7.1	50.0	28.6	14.3	0.0	100.0(28)	2.50(.84)
장애아동	25.0	39.3	25.0	10.7	0.0	100.0(28)	2.21(.96)
조손가정 아동	35.7	28.6	28.6	7.1	0.0	100.0(28)	2.07(.98)
미혼부모 가정 아동	39.3	35.7	21.4	3.6	0.0	100.0(28)	1.89(.88)
환아	32.1	50.0	17.9	0.0	0.0	100.0(28)	1.86(.71)
기아, 유기 아동	46.4	35.7	17.9	0.0	0.0	100.0(28)	1.71(.76)
학대피해아동	42.9	46.4	10.7	0.0	0.0	100.0(28)	1.68(.67)
장애부모의 아동	57.1	25.0	14.3	3.6	0.0	100.0(28)	1.64(.87)
방임아동	46.4	50.0	3.6	0.0	0.0	100.0(28)	1.57(.57)

주: 평균은 '매우 부족(1점)'~'매우 충분(5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아동 대상별 육아정책의 필요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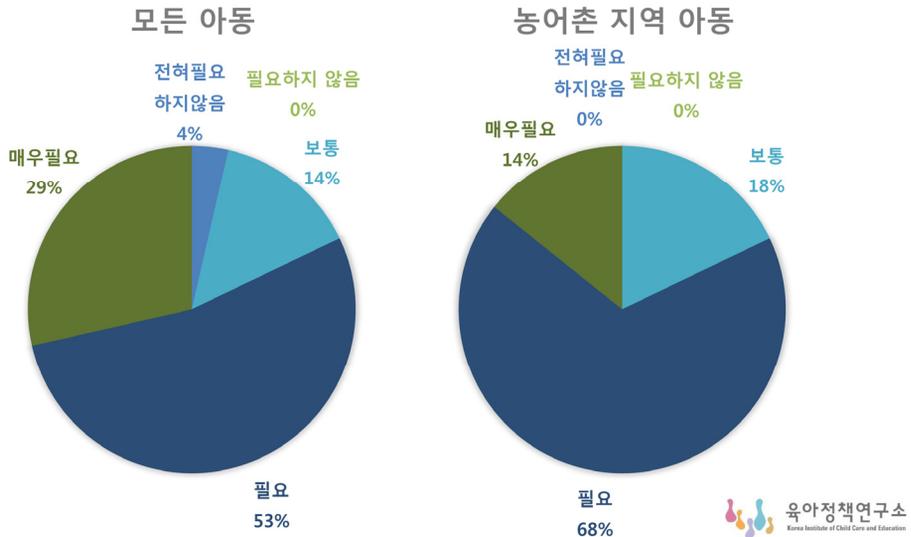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	매우 필요	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모든 아동	3.6	0.0	14.3	53.6	28.6	100.0(28)	4.04(.88)
농어촌 지역 아동	0.0	0.0	17.9	67.9	14.3	100.0(28)	3.96(.58)
방임아동	0.0	3.6	0.0	21.4	75.0	100.0(28)	4.68(.67)
학대피해아동	0.0	3.6	0.0	25.0	71.4	100.0(28)	4.64(.68)
장애아동	0.0	0.0	3.6	32.1	64.3	100.0(28)	4.61(.57)
장애부모의 아동	0.0	0.0	3.6	35.7	60.7	100.0(28)	4.57(.57)
미혼부모 가정 아동	0.0	0.0	10.7	25.0	64.3	100.0(28)	4.54(.69)
조손가정 아동	0.0	0.0	3.6	39.3	57.1	100.0(28)	4.53(.58)
기아, 유기 아동	0.0	3.6	3.6	28.6	64.3	100.0(28)	4.53(.74)
한부모 가정 아동	0.0	0.0	0.0	53.6	46.4	100.0(28)	4.46(.51)
빈곤아동	0.0	0.0	10.7	35.7	53.6	100.0(28)	4.43(.69)
맞벌이 가정 아동	0.0	0.0	3.6	64.3	32.1	100.0(28)	4.29(.53)
환아	0.0	3.6	3.6	39.3	53.6	100.0(28)	4.23(.74)
다문화 가정 아동	0.0	0.0	10.7	57.1	32.1	100.0(28)	4.2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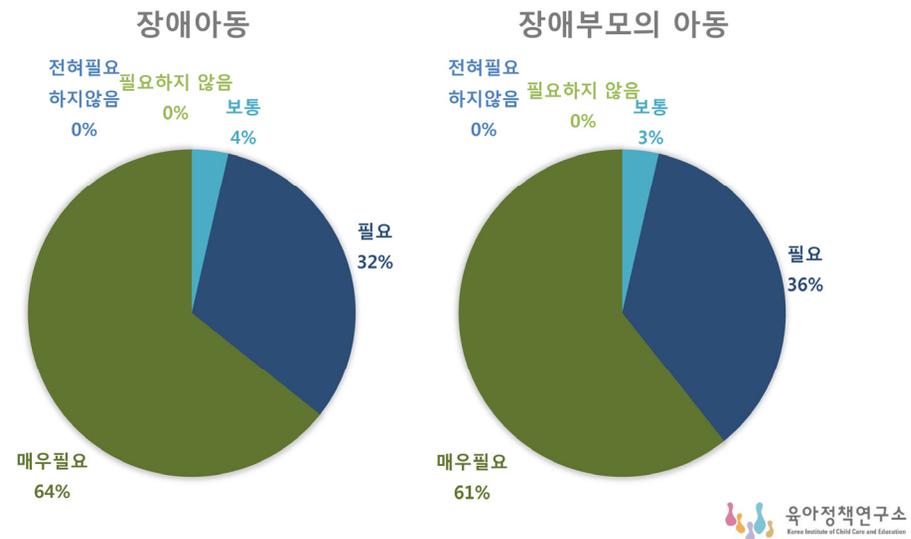
주: 평균은 '전혀 필요하지 않음(1점)'~'매우 필요(5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아동 대상별 육아정책의 필요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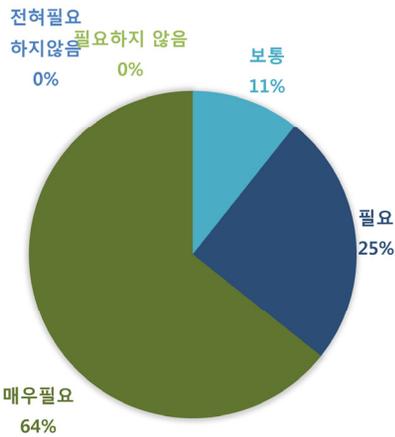


아동 대상별 육아정책의 필요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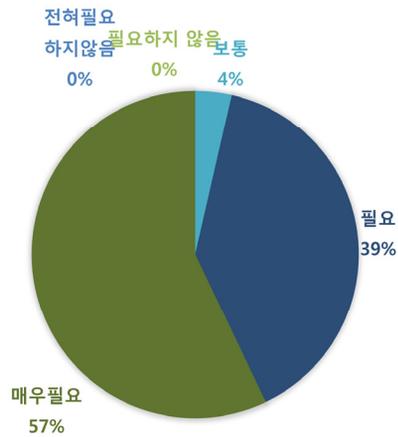


아동 대상별 육아정책의 필요성 정도

미혼부모 가정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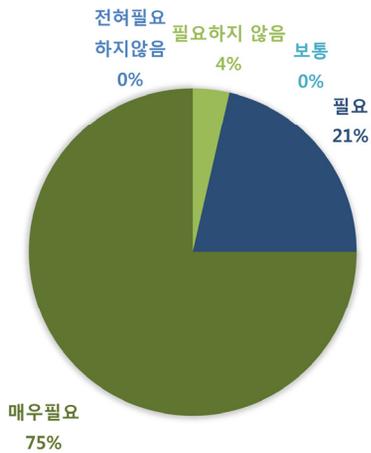
조손가정 아동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아동 대상별 육아정책의 필요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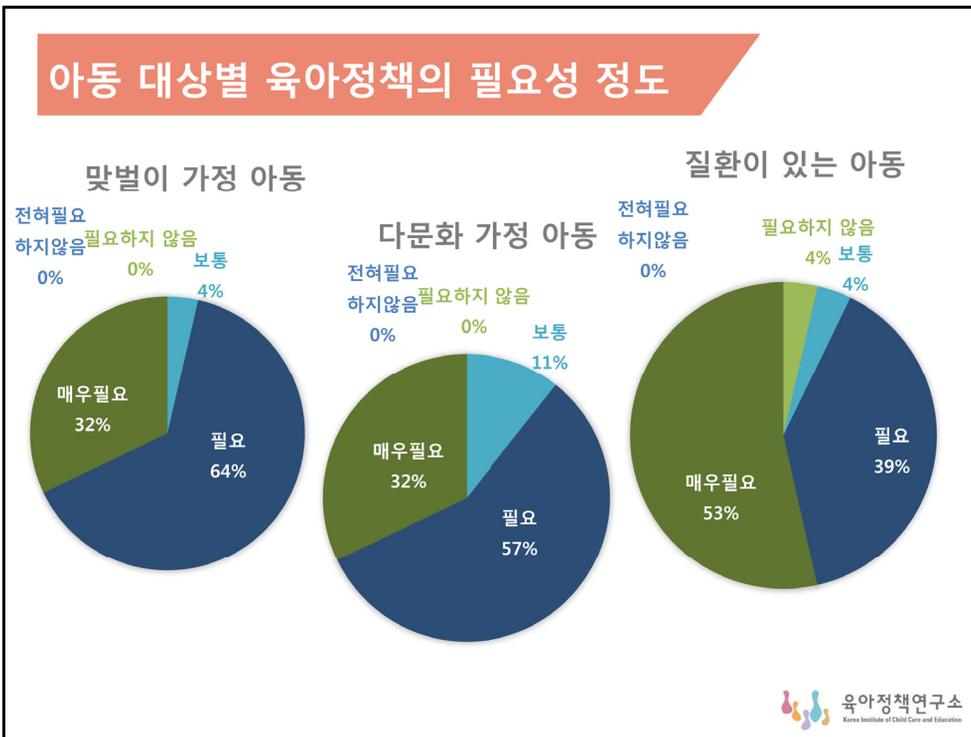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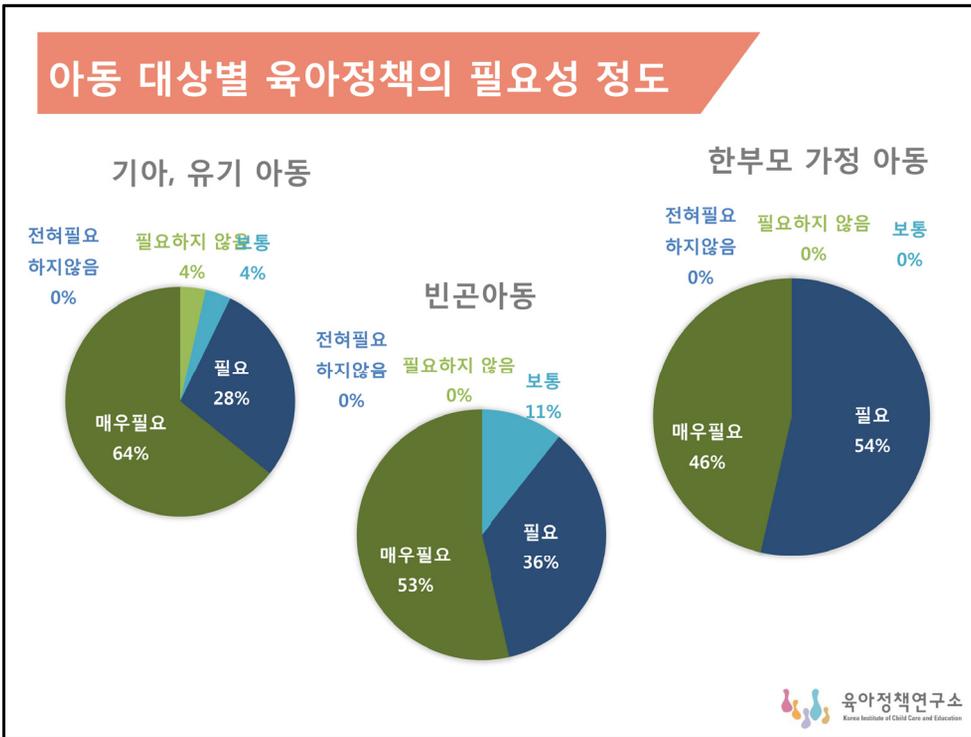
방임아동



학대피해아동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가족유형별 정책의 충분성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족	부족	보통	충분	매우 충분	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모든 가족	71	214	571	143	00	1000(28)	279(79)
다문화 가족	107	393	286	179	36	1000(28)	264(103)
맞벌이 가족	71	357	500	71	00	1000(28)	257(74)
농어촌 거주 가족	179	429	321	71	00	1000(28)	229(85)
빈곤 가족	250	393	286	36	36	1000(28)	221(99)
한부모 가족	179	536	179	107	00	1000(28)	221(88)
장애아동의 가족	250	500	250	00	00	1000(28)	200(72)
장애부모가족	393	393	143	71	00	1000(28)	189(92)
조손가족	357	464	143	36	00	1000(28)	186(80)
환아 가족	250	714	36	00	00	1000(28)	179(50)
미혼부모 가족	464	357	143	36	00	1000(28)	175(84)

주: 평균은 '매우 부족(1점)'~'매우 충분(5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가족유형별 정책의 필요성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	매우필요	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미혼부모 가족	00	00	71	321	607	1000(28)	454(64)
장애부모가족	00	00	36	429	536	1000(28)	450(58)
조손가족	00	00	36	500	464	1000(28)	443(57)
장애아동의 가족	00	00	36	500	464	1000(28)	443(57)
환아 가족	00	00	00	571	429	1000(28)	443(50)
빈곤 가족	00	00	36	536	429	1000(28)	439(57)
한부모 가족	00	00	71	500	429	1000(28)	436(62)
맞벌이 가족	00	00	143	643	214	1000(28)	407(60)
다문화 가족	00	00	107	714	179	1000(28)	407(54)
모든 가족	36	00	214	571	179	1000(28)	386(85)
농어촌 거주 가족	00	00	250	643	107	1000(28)	386(59)

주: 평균은 '전혀 필요하지 않음(1점)'~'매우 필요(5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육아 관련, 저출산 정책 중 우선적 추진 정책 분야

단위: %(명), 점

구분	1순위	2순위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환경개선	393(11)	35.7(10)
양적/질적 보육·돌봄 확대	21.4(6)	17.9(5)
청년고용지원	10.7(3)	3.6(1)
비혼 출산(미혼모), 입양 등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1(2)	10.7(3)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7.1(2)	7.1(2)
안전한 육아 환경 조성(아동학대 근절 등)	7.1(2)	0.0(0)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0.0(0)	14.3(4)
영유아 건강 증진 정책	0.0(0)	3.6(1)
임산부 지원 정책	0.0(0)	0.0(0)
성평등한 육아 환경 조성	0.0(0)	3.6(1)
기타	7.1(2)	3.6(1)
계	100.0(28)	100.0(28)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융합·포괄적 육아정책개발 및 수립 위한 역할 강화 필요 분야

단위: %(명), 점

구분	1순위	2순위
가족(복지)학	42.9(12)	25.0(7)
사회복지학	32.1(9)	21.4(6)
경제학	7.1(2)	17.9(5)
여성학	7.1(2)	14.3(4)
보건학	7.1(2)	7.1(2)
법학	3.6(1)	3.6(1)
행정학	0.0(0)	3.6(1)
기타	0.0(0)	3.6(1)
계	100.0(28)	96.4(27)

주: 1) 중요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산출한 것임.

2) 현재 육아정책연구는 유·보육 분야 중심이므로, 유아교육학, 아동학, 보육학은 보기에서 제외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맺음말

- 전문가 28인 대상 조사
- 육아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성
 - 양성 평등
 - 아동 중심(아동복지)
 - 일과 생활의 균형
 - 전 계층 포괄
- 육아정책연구 포괄 연령범위 확대: 초등 저학년까지
- 육아정책연구 포괄 시기 확대: 자녀 임신 후~출산 전
 - 시기별 필요 정책: 부모교육
- 장애, 방임 가구 등 취약가구에 대한 육아정책의
 - 충분성 여전히 낮아
 -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 높음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감사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4층
Tel. 02-398-7700 www.kicce.re.kr